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

1992-2016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상호 변화의 비교적 분석

2021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팅팅

1992-2016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상호 변화의 비교적 분석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팅팅

팅팅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8 월

위 원 장 신성호

부 위 원 장 최용섭

위 원 박태균

목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질문의 제시와 함의 2
3. 기존 연구와 한계 3
4.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 6

II. 탈냉전기 이전까지의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7

1. 1950 년대 7
2. 1960-1970 년대 10
3. 1980 년대-냉전기 말기 15
4. 냉전 체제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상호적 변화 18

III. 1992-2016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22

1. 1992-1997 23
2. 1998-2007 32
3. 2008-2016 48

IV. 1993-2007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변화의 요인 분석과 양자 간의 상호적 변화 61

1. 남북관계의 변화요인 61
2. 북·중관계의 변화요인 68

3.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상호적 변화 71

V. 결론 76

VI. 참고문헌 81

VII. Abstract 94

그림 목차

<표 1> 남북대화현황(1971-1992) 16

<표 2> 1982.09-1992.06 북중 고위급 각료 방문 17

<표 3> 냉전체제 하에 북한 중심의 생존 전략 19

<표 4> 1990-1997 한중·남북·북중 무역 상황 추이 비교 24

<표 5> 1992-1998 한중·북중 고위급 각료 외교 활동 빈도 27

<표 6> 1993-1997 북한과 세계 주요 국가의 GDP 28

<표 7> 1988-1992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상황 30

<표 8> 1998-2007 한중 무역 상황 추이 33

<표 9> 1998-2007 남북·북중 무역 상황 추이 비교 33

<표 10> 1998-2007 한중·남북·북중 무역총액 연간성장률 추이 비교 34

<표 11> 1998-2001 남북·북중 정상 외교 활동 빈도 비교 37

<표 12> 2000-2007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상황 40

<표 13> 2002-2004 남북·북중 정상 외교 활동 빈도 비교 43

<표 14> 2008-2016 한중 무역 상황 추이 49

<표 15> 2008-2016 남북·북중 무역 상황 추이 비교 49

<표 16> 2008-2016 한중·남북·북중 무역총액 연간성장률 추이 비교 50

<표 17> 2008-2016 한중·남북·북중 고위급 각료 방문 및 정상회담 개최 빈도 비교 53

<표 18> 2013-2016 남북회담 분야별 회담개최 횟수 54

<표 19> 공통 변수의 작용 하에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상호적 변화 기제 74

I. 서론

1. 연구 배경

1985 년 3 월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총서기를 취임하여 새로운 개혁 이데올로기인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을 제기하였다. 이는 소련의 사회·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양 진영과의 격화된 대외관계를 완화시키고 국제 지역간 충돌과 분쟁에 대한 간섭을 감소시키고 '평화공존'이라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의도였다[1]. 고르바초프 정권의 새로운 개혁에 따라 80 년대 말기에 들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 진영의 동유럽국가 정권들이 불안정해지고 외부적으로는 미·소 대립 관계에 근거한 냉전체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동서 간의 국제질서가 양극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다극화 형태로 과도하기 시작하였다[2].

20 세기 90 년대에 들어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잇따른 붕괴와 소련의 해체에 따라 미·소 대립 구도에 의해 확립된 냉전체제가 점차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냉전 시기에 가장 주목받는 지역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의 외교도 탈냉전 시대에 들어섰다. 따라 동북아시아지역의 외교관계에 있어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국, 북한, 중국 또는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각각 국내적인 경제와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시대 변화에 순응하여 전쟁의 대립관계, 대치 관계, 또는 적대 관계에서부터 지속적, 우호적, 평화적인 대외관계를 모색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국가전략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기초한 동아시아지역의 국제관계가

---

[1] 李敦球. 2007. 『戰後朝韓關係與東北亞格局』. 新華出版社. p.74.

[2] 민병원. 2014. 「국제정치체제 모델의 다양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 48 집 제 2 호. p.188.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시도한다는 새로운 행태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남북과 북·중의 관계 변화다.

20 세기 90 년대부터 2016 년까지의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는 발전과 정체, 개선과 악화의 반복 속에 불안정한 형태로 지속해왔다. 남북관계는 한국전쟁으로부터 80 년대 말기까지 이어진 철저한 이데올로기의 적대 관계로부터 90 년대 초기 노태우 정부, 90 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1998-2007 년 김대중·노무현 진보정부와 2008-2016 년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시대를 거쳐 각 정부 대북정책의 촉진 하에 대화·접촉과 교류·협력의 증진과 단절의 반복에 부침을 거듭한 한편, 북·중관계는 튼튼한 공산주의 혈맹관계에서 갈라진 외교전략과 발전노선으로 인해 경색되었다가 21 세기에 들어 공동이익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 실리주의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구축으로 변모되었다[3].

2. 연구 질문의 제시와 함의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냉전 시기에 남북 간의 적대관계와 북·중 간의 공산주의 연맹 관계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정반대 관계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정반대 관계였던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탈냉전 시기에 들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가. 탈냉전 시기에 들어 한국, 북한과 중국 세 나라는 각각 어떤 외교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는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또한 이 두 가지 관계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관련성과 연동성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 관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적인 변수가 있었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입각해서 본 글은 1992 년에서 2016 년까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를 논의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우선 1992 년부터 2016 년까지 남북관계와

[3] 李南周. 2005.「朝鮮的變化與中朝關係——從“傳統友好合作關係”到“實利關係”」. 『現代中國關係』2005 年第 9 期. p.55.

북·중관계가 각자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두 관계의 상호적 변화의 요인과 변수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탈냉전기에 들어 한국, 북한과 중국이 각자 어떤 발전노선을 설정했고 이에 따라 어떤 외교전략과 대외정책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냉전기 전후 동북아시아지역의 구도와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이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셋째, 한국, 북한, 중국 간의 상호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동향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한국, 북한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배우는 데에 있이 본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다.

3. 기존 연구와 한계

1992-2016 년, 즉 20 세기 90 년대 탈냉전기부터 2016 년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해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우선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한국 학자 김갑식(2010)은 탈냉전기 북한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를 다룬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해 탈냉전기 북한의 인식이 기본인식과 쟁점인식으로 나뉠 수 있다. 기본인식은 대남인식(적성 vs. 동포성)과 통일문제인식(민족자주권 vs. 민족대단결)이 포함되고 쟁점인식은 접근방법(특수성 vs. 국제성), 접촉방식(상층통일전선 vs. 하층통일전선)과 우선순위(정치군사분아 vs. 경제사회분야)로 구성된다. 김갑식은 이 틀 속에 탈냉전기 후 북한의 인식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와 추세를 논의하였다. 임재형(2003)의 연구도 북한의 외교정책과 전략에 집중하여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의해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한 한편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적성을 포기하지 않는 강경협상전략과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는 온건협상전략을 병행했으니 불확실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남궁영과 김형기(2009)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 측의 대북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라 탈냉전기 이래 한국 역대 정부가 주로 포용적인 포괄적 상대주의(GRIT 전략)를 적용해왔으나 이러한 일방적인 전략은 북한의 갈등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남궁영, 김형기, 2009, pp.353) 또는 김천식(2014)은 탈냉전기 초기 한국의 통일정책에 집중하여 냉전체제에서 탈냉전체제로 전환한 시기에 한국의 통일정책이 점차 체계화되는 과정을 논술하였다. 그 외에 남북관계를 영향주는 다른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있다. 김현기(2011)는 탈냉전기 미국 정부의 대북전략과 미북관계가 남북 간 관계의 변화에 주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한국정부의 협력적 태도가 북한의 갈등 상태를 완화하지 못한 반면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갈등과 협력 태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중국 학자 沈定昌(2008)의 연구도 남북관계에 영향 주는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 결책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북·중관계를 다룬 연구도 다양하게 있다. 북한 측의 연구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제 3 국 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공부하였다. 김경호(2001)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북·중관계의 전개과정과 탈냉전기에 들어 관계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그는 탈냉전기의 북·중관계는 전시의 혈맹관계라는 특수관계에서 '국가이익에 추점을 맞추는 동복아지역의 질서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문제에 접근할 것' (pp.36) 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런밍(2011)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2000 년대 초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분석하였다. 그 결론은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라는 기본경제발전전략을 견지했음으로 탈냉전기에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여전히 높았다. 한편, 일본 학자 히라이와 슌지(2013)는 한국전쟁 후부터 21 세기까지 60 년 동안 북·중관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후 소련의 붕괴, 냉전체제의 해제, 한중 국교정상화와 발전노선의 다른 선택에 따라 북·중 간 전통적인

‘순치관계’가 이완되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李南周(2005)는 탈냉전시기에 들어 중국과 북한의 관계변화를 분석한 결과, 20 시게 90 년대 후기부터 악화됐던 북·중관계가 회복기에 들어섰으나 이데올로기나 이념 공유의 토대보다 현실적인 공동이익과 전략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였다. 특히 그는 양국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었지만 이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刘清才(2007), 韩献栋(2009)은 지정학적으로 탈냉전 배경 하에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연 정치 시각의 북·중관계와 중국의 전략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20 세기 90 년대 탈냉전기에 한국, 북한과 중국 세 가지 주체 각각의 전략, 주체 간의 상호관계, 관계의 변화와 다른 행위자에 관한 기존연구가 광범위(동아시아지역의 정치 구도)와 좁은 범위(특정 사건이나 특정 정부에 집중함)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과 같이 몇가지 한계성이 있다. 첫째, 체계적이지 못하는 점이다.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로 냉전기 전후 양국 관계의 변화와 변화 요인을 논의하였으나 대부분 하나의 정부, 정책 혹은 시기에 집중하여 분석한 것이다. 90 년대부터 역대 정부나 시기별로 관계의 전개와 변화과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서술한 자료가 많지 않다. 둘째, 관계의 변화에 있어 측정하는 기존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다. 양국 관계가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겪으면서 호전인지 악화인지를 평가했을 때 연구들마다 각자의 기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평가의 기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도 있다. 셋째,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존재하나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결여하다.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를 따로 연구하는 자료가 많지만 양자의 관련성과 연동성을 연구하는 글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4.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1992 년부터 2016 년까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한중, 남북과 북·중 간 경제무역액과 무역 성장률, 경제 원조와 지원 상황, 경협 사업과 프로젝트의 내용과 규모, 정치적으로 정부 지도자와 고위급 각료의 상호 방문 횟수, 중요 문서의 체결, 정상회담의 개최 횟수와 의제 내용의 중요도 또는 각 정부의 공식문서, 기관지의 기사와 같은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시기 범위는 1992 년부터 2016 년까지로 선정된다. 1992 년 한중 수교는 동북아시아 지역 공산주의권의 퇴조와 탈냉전화를 상징하며 한국·중국·북한이 각각의 대외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1992 년에서 출발하여 2016 년 북한의 4 차 핵실험 실시까지라는 시기를 다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북한, 중국 세 나라의 내부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외부적인 대외관계의 방침·노선 변화가 가장 뚜렷이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 장에서 1992 년 이전까지 냉전체제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배경과 추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한 후, 제 3 장부터 1992-1997, 1998-2007, 2008-2016 라는 세 시기별로 경제적과 정치적 근거(evidence)를 사용하여 남북관계(A)와 북·중관계(B)가 각 시기에 어떻게 연동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논의한다. '어떻게 변화'에 기초하여 제 4 장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지를 다루고자 한다. 즉, A 와 B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냉전시대 전후 A 와 B 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공통적인 변수가 있고 이에 따라 A 와 B 의 상호적 변화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 5 장은 위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부족한 점을 다시 생각해 본다.

II. 탈냉전기 이전까지의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본 장은 탈냉전기 전, 즉 전시 냉전체제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어떻게 전개했는지, 어떠한 굴곡이 있었는지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1950 년대

1945 년 8 월에 일본군의 항복에 따라 제 2 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해방의 빛은 찾아오지 못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난 한반도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아시아지역의 세력 확장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다[4].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 장기간의 협상을 거듭하였으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더이상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서 한반도에서 하나의 통일정부를 세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1946 년 2 월부터 미국의 주도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은 절차적으로 민주의원과 제헌국회를 개최하고 7 월에 대한민국헌법 초안을 통과하였다. 1948 년 8 월 15 일에 이승만은 한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을 취임하였다[5]. 같은 시기에 북한 지역도 소련의 촉진 하에 김일성을 비롯한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하고 1948 년 9 월 8 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하였다. 이듬 날에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6]. 이에 따라 한반도는 같은 민족에 의해 수립된 남북 두 개의 단독 정부로 인해 분열 상태로 되었다.

---

[4] 韓獻棟. 2009.『朝鮮半島的安全結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5.

[5] 유연익. 2006.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이승만 국회의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38, p.180.

[6] 김일성. 1954. 『김일성선집』 제 2 권. 평양 : 조선로동당. p.264.

한반도에서 통일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남북 정부로 갈라진 것은 실질적으로 냉전 시기 동서 진영의 근원적인 대립과 투쟁을 상징하였다. 외부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정치 협상을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실패하였고 내부적으로 남북 정부의 정당들이 서로 협상하여 통일 입법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도 실패하고 말하였다. 협상과 대화로 서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못한 남북 정부는 결국 무력 수단으로만 정부 합법성 논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38 선 주변에 일어난 남북 간의 무장 충돌이 날로 빈번해 진 결과, 1950 년 6 월 25 일 새벽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7].

'무력 통일' 사상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세계 각국의 개입과 참전으로 인해 점차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동서 진영 간의 대결로 되어버렸다. 한국전쟁은 3 년에 걸쳐 1953 년 7 월 27 일에 국제연합군과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시기의 남북관계는 정전 문제를 협상 시 남북 정부의 주도자인 이승만과 김일성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김일성은 정전협정은 일시의 정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태도를 표하면서 정전은 긴장된 국제 정세와 한반도지역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8]. 한편, 이승만은 멸공 북진 통일의 주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정부의 이데올로기적인 적성과 불법성을 강조하고 정전을 했지만 무력으로야만 북한 공산주의를 박멸하고 북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이념을 고수하였다[9]. 1954 년 4 월에 한반도 통일 문제를 둘러싼 제네바정치회담이 개최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제네바정치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남북 정부가 국제적 회담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협상하는 의미에서 남북관계

---

[7] 전쟁기념사업회. 1992. 『한국전쟁사』 제 1 권. 서울 : 행림출판. p.154.

[8] 김일성. 1980. 『김일성선집』 제 7 권. 평양 : 조선로동당. p.533.

[9] 김학민. 2015. 「남북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 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8(1), 2015-03, p.51.

회복의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다[10]. 이 시기에 남북 정부는 '정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공통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모두 군비 증강을 중요시하고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중국과 북한은 제 2 차 세계대전, 중국 해방전쟁과 한국전쟁의 공동 작전과 전쟁 원조를 통해 확고한 혈맹관계를 맺었다. 우선 제 2 차 세계대전 시 중국과 북한은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을 편성하여 항일 유격전을 공동 작전하였다. 항일과 해방의 목표, 장기간 공동 작전의 경험과 전쟁 원조, 그리고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공동 목표 추구에 의해 북·중 간의 혁명 관계가 구축되었다[11]. 1946-1949 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해방전쟁이 발발할 때도 북한은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전략적인 후방으로 군사와 물자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이 국민당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격멸하는 데에 있어 많이 지원하였다[12]. 1949 년 중국공산당의 승리에 따라 새로운 중국 정부가 수립되어 북·중관계가 한층 긴밀해졌다.

1950 년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되돌렸다. 이 때 김일성이 마오쩌동과 연락하여 중국군의 지원을 구하였다. 이를 승낙한 중국 정부는 1950 년 10 월 19 일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출동시켜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정식 참전하였다. 물론 중국의 출병 동기는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처하는 입장과 책임감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地政)적인 중요성, 중국 동북의 안보문제 그리고 소련의 압력[13]에도 직결된 것이다.

세 번 전쟁의 공동 작전의 경험을 거친 북한과 중국은 20 세기 50 년대에 튼튼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의 북·중관계에 있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소련이다.

---

[10] 김벽두. 1955. 「제네바회담의 의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4 권 8 호. p.30.

[11] 楊軍. 2006.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216.

[12] 呂明輝. 2013. 「朝鮮對我東北解放戰爭的支持」. 紅旗飄飄, 2013,(11). p.51.

[13] 盧寧. 2005. 「也談影響中國出兵朝鮮決策的因素」. 當代中國史研究. 2005,(5). p.89.

북한과 중국은 소련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경제를 발전하고 새로운 정권을 공고하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소련이 극동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익 확보와 전략 목표의 실현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14]. 때문에 20 세기 50 년대 말기까지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북한, 중국과 소련은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정치와 군사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북·중 간은 경제와 문화적인 원조와 교류도 많았다. 1953 년 11 월에 김일성과 북한 정부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조 경제 및 문화 협작 협정(<中朝經濟及文化合作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북한과 중국은 문화, 교육, 과학 등 분야의 학자의 교환 방문, 교환 학생, 출판사, 방송사 간의 협력 등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축진하였다. 1958 년 9 월에 북한과 중국 정부는 '1959-1962 년장기무역협정(<1959-1962 年長期貿易協定>)'과 '중국 대조 대열 제공에 관한 협정(<關於中國向朝鮮提供兩項貸款的協定>)'을 체결하였다[15].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이 해마다 배수로 증가하였다. 석탄, 면사, 강재, 금속, 기계와 식량 등 원재료의 지원도 거듭 진행하였다. 한 마디로 이 시기의 북·중 간의 협력과 교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었다[16].

2. 1960-1970 년대

1960 년 4 월 19 일 한국에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반정부 학생운동이 벌어졌다. 내각책임제의 확립과 민주화운동의 진행에 따라 남북 통일 문제가 다시 부상되었다. 8 월

---

[14] 李瑞琴. 2010. 「中朝關係的歷史演進及當代影響(1949-1961)」. 西南科技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p.24.

[15] 人民日報. 1960. 「進一步鞏固發展中朝人民友誼 增強社會主義陣營偉大團結和力量 中朝兩國簽訂兩項經濟協定」. 『人民日報』. 1960.10.14.

[16] 姜龍範. 2002. 「中朝關係的歷史、現狀與發展——關於朝鮮半島問題上的中國戰略」. 『多元視野中的中外關係史研究——中國中外關係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大會論文集』. p.462.

민주당은 '흡수통일'을 견지하지 않고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남북 공동 국회를 설립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이룬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17]. 그러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선거'이념에 기초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북한은 '외부 개입이 없는 민주주의적인 자유 선거'라는 전제 조건을 강조하였다. 대신에 김일성은 남북 두 지역에서 정부의 제도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연방제를 제안하였으나[18]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남북이 선거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였다.

1961 년 박정희에 의한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60 년대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혁명공약 제 1 항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19]'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반공법과 특수범죄처벌법 제정, 국가보안법 수정, 북한 불승인 원칙 등 강경정책을 실시하였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박정희 정부는 '복한보다 경제적·문화적·사회적·군사적으로 압도할 절대 우위의 역량을 갖추어'야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무엇보다 먼저 한국의 경제 발전과 현대화 건설을 제일의로 삼는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실시하였다[20]. 한편, 박정희의 강경 대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정부도 대남정책을 조정하여 1964 년 2 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혁명론'을 통과하였다. 남조선혁명론은 남한에서 북한이 좌우할 수 있는 혁명역량을 주체로 하고 남한에서 혁명을 통해 조선과 같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상이다[21]. 이와 같이 남북 정부의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 60 년대 후반에 38 선 주변 지역에서 남북 간의 무력충돌 날로 심각해졌다. 20 세기

---

[17] 정일형. 1970. 『오직 한 길로』. 서울 : 新進文化社. p.278.
[18] 김일성. 1981. 『김일성선집』 제 14 권. 평양 : 조선로동당. p.246.
[19] 국가재건최고회의. 1963. 『한국군사혁명사』, 제 2 권, 서울: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pp.7-8.
[20] 변창구. 2011. 「제 1 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함의」. 통일전략.11(2), 2011.7, p.15.
[21] 편집부. 1988.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력량의 편성」. 북한 1988 년 9 월호(통권 제 201 호) , p.119.

60 년대의 남북관계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서로 대립된 이념과 정책으로 인해 악화되어 상당한 적대성이 나타났다.

70 년대에 들어 냉전체제 하의 국제 정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외부적으로 중·소(中·蘇)분쟁,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 위기와 '닉슨 독트린'의 제기, 그리고 이에 따른 미소관계와 미중관계의 완화, 더불어 내부적으로 한국 경제의 급속 발전, 안보 불안에 따라 남북 간도 적대에서 대화의 길을 시도하게 되었다. 1970 년부터 남북 정부가 남북 대화와 평화통일의 구체적인 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남북 교류의 일환으로 남북한 적십자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공동 촉진하였다[22]. 1972 년 7 월 4 일에 남북 정부가 서울과 평양에서 '자주', '평화'와 '민족 대단결' 삼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남북공동성명'을 동시 발표하였다[23].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분열 상태가 된 한반도가 처음으로 남북 정부 수뇌들의 직접 대화와 촉진 하에 남북 간이 타협점을 찾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1972-1973 년에 남북 정부가 남북조절위원회를 둘러싸 세 번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남북공동성명 발표가 지난 2 년 후인 1973 년 6 월 23 일에 박정희가 '6·23 선언'을 발표하였다[24]. 이 선언에서 박정희는 북한에 대해 '불신요소를 남겨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선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

[22] 변창구. 2011. 「제 1 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함의」. 통일전략.11(2), 2011.7, p.18.

[23]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7.4 남북공동성명」.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114

[24] 大統領秘書室 [편]. 1974.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10』. 서울 : 대통령비서실. p.165.

계속하여 왔다고[25]' 표하였다. 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에 있어 그는 불간섭의 태도를 취했으나 이는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26]'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에 김일성은 고려연방제의 구상을 제기하고 통일 국호로 유엔을 가입하는 것을 주창하였다. 유엔 가입 문제에 있어 남북 정부의 정반대된 입장과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남북 간의 불신과 대립을 다시 격화시켰다. 이에 따라 1975 년부터 남북조절위원회를 비롯한 남북 대화가 일시적으로 모두 중단되었다[27].

20 세기 60 년대와 70 년대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60 년대 대립 이념을 고수하는 남북 정부가 외부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 중국, 소련 등 주요 국가의 외교 전략의 조정과 내부적으로 남북 경제 실력의 대등 , 한반도 지역 안보 불안 문제의 해소 등 유리 조건에 의해 70 년대에 평화통일제안을 촉진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호적 태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물론 1973 년에 남북 대화의 중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체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북·중관계는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시기는 50 년대 말기-60 년대 중기이다. 이 시기에 중국과 소련은 흐루시초프의 정책전환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논쟁이 시작하였고 이념 대립 상태로 되었다. 흐루시초프의 정책전환과 중국 정책에 대한 비난, 중국공산당이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과 쇼비니즘 사상에 대한 불만, 중국·인도 국경분쟁 문제, 대중 핵 기술 제공 거부 등 이념적과 현실적인 갈등으로

---

[25] 조갑제. 2009.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p.477.

[26] 중앙일보. 1973. 「통일에 장애 안되고 다수회원국 뜻이라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않는다」. 중앙일보. 6 월 23 일.

[27]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2000. 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2000. p.157.

인해 중국과 소련 간의 분쟁이 점차 격화되었다. 1961 년 10 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 22 차 화의에서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화 정책 제기에 따라 중·소 간의 갈등이 공개된 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28]. 이 때 중국과 소련 사이에 있는 북한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북한의 주체와 지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 그러나 파리정상회담 결렬 후 수정주의에 대한 비난과 1962 년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중립 타도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편향적인 자세로 입장을 바꿨다[29]. 1961 년 7 월 11 일에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이 체결되어 이 조약에서 양국은 전쟁 발생 시 군사와 기술의 원조, 경제 협력, 공동 이익 추구 등 내용을 약속하였다[30]. 이어 1961-1965 년 간에 중국의 대조 경제원조의 규모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의 요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한 것에 비해 소련이 대조 원조에 대해 다소 차가운 태도가 보인다.

둘째 시기는 60 년대 후기부터 70 년대 초기까지다. 고조된 북·중관계는 이 시기에 들어 급속히 악화되었다. 중소분쟁 가운데 있는 북한은 중·소 간의 제로 섬 게임의 심각함에 따라 중국과 소련 한 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서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홍위병(紅衛兵)이 김일성에 대한 비난 언론[31]으로 인해 북·중 간의 갈등이 쌓였다. 뿐만 아니라 1965 년부터 양국이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도 지속하였다. 여러 갈등으로 인해 60 년대 후반기에 북·중 간 방문 활동, 경제 및 문화 교류 등의 왕래가 거의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32].

---

[28] 吳冷西. 1999. 『十年論戰:1956-1966 中蘇關係回憶錄』. 中央文獻出版社. p.205.
[29] 김학준. 1984. 「중소분쟁 속의 북한외교」. 아세아연구 통권 71 호. p.59.
[30] 人民日報. 1961. 「中國朝鮮友好合作互助條約」. 『人民日報』. 1961.7.11.
[31] 『로동신문』. 1996. 8.12. 제 2 판.
[32] 沈志華. 2016. 「破鏡重圓:1965-1969 年的中朝關係」.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p.4.

3. 1980 년대-냉전기 말기

1979 년 10 월 26 일 한국 대통령 박정희의 사망에 따라 박정희 정권이 무너져 1981 년에 쿠데타를 통해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다. 전두환 정부는 새로운 통일 방안의 모색,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의 추진, 대북 물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를 검토하였다[33].

우선 통일 방안에 있어 1982 년 1 월 22 일 전두환은 국정연설에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새로 제기하였다. 이 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는 남북 대표로 될 '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해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반포한 뒤, 헌법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34]. 한편, 이 시기에 김일성의 통일 방안은 1980 년 10 월 10 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 6 차 대표회의에서 잘 나타난다. 김일성은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의 구상을 제기하였다.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안은 남북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에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남과 북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에서 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이다[35]. 한반도의 최종적 통일에 목표로 두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비해 연방제 통일안은 '두 개의 정부, 두 종의 제도'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남한의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로 김일성의 통일안 제기는 남북 통일 과제에 진보적인 영향을 주었다[36].

---

33 통일부 기획관리실 [편]. 1999. 『통일부 30 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 통일부 기획관리실. p.117-119.

34 「전두환 1982 년도 국정연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35 김일성. 1987.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 조선로동당. p.347.

36 이상우 [편]. 1987. 『統一韓國의 摸索 : 理念, 環境과 政策的 努力 = Search for one Korea』. 서울 : 博英社. p.162.

둘째,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내용을 둘러싼 남북 대화에 대하여 남북 양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표하였다.

<표 1> 남북대화현황(1971-1992)

남북대화현황(1971-1992)			
제2기(1980-1987)		제3기(1988-1992)	
● 총리회담준비(80)	: 10	● 고위급회담(89-92)	: 131
● 적십자회담(84-85)	: 5	● 국회회담(88-90)	: 11
● 체육회담(84-87)	: 7	● 적십자회담(89-92)	: 18
● 경제회담(84-85)	: 5	● 체육회담(89-91)	: 23
● 국회회담(85)	: 2		
계	29회	계	183회

자료 출처: 임동원. 1997.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pp.73

<표 1>와 같이 1980 년대부터 남북이 정치 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분야의 대화도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물론 80 년대 초에 제기된 남북 총리회담은 결국 협의되지 못한 상태로 유산된 것은 아직 남북 간의 불신이 남아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났으나 그 전보다 이 시기에 남북은 남북 대화를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였다. 그 외에 1984 년 9 월에 한국이 홍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북한적십자가 남한 이재민에게 대량의 식량과 구호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전쟁 이래 남북의 첫 물자 교류가 되었다. 이는 남북 대화의 일환으로 제 1 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남북 간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0 세기 80 년대의 남북관계는 양측의 노력 하에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은 문화와 체육 등 분야의 범위 내에 잘 보여주나 정치 영역에 있어서 아직 협의와 신뢰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통일안 구상의 차이성, 정상회담의 중단, 북한 삼자 회담 창의의 유산 등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다.

한편, 닉슨의 방중, 양극체제의 완화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심화에 따라 80년대에 중국은 소련과 대항하는 악성 경쟁에서 벗어나 더욱 독립적·자주적인 외교 노선으로 대외 전략을 조정하였다. 이런 배경에 냉전기 말기에 들어 북·중 간 고위급 각료의 방문 행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북·중관계가 회복기에 들었다.

<표 2> 1982.09-1992.06 북·중 고위급 각료 방문

1982.09-1992.06 북·중 고위급 각료 방문					
중국 측 방조(訪朝)			북한 측 방중(訪中)		
직위	인원명	날짜	직위	인원명	날짜
중공중앙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 지앙쩌민(江澤民)	1985.10 1989.04 1990.03	위원장	김일성	1984.11 1987.05 1989.11 1991.10
국가 주석	리셴넨(李先念) 양상쿤(楊尚昆)	1986.10 1988.09 1992.04	총리	강성산 이근모	1984.08 1987.11
국무원 총리	리펑(李鵬)	1991.05			
외교 부장	우쉐첸(吳學謙)	1983.05	부총리 겸 외장	김영남	1984.02 1988.11
국무위원 겸 외장	치앤치천(錢其琛)	1991.06			
총	14 회		총	71 회	

자료 출처: 劉金質, 楊淮生(편). 1994.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1949-1994)(중국대조선및한국정책문건휘편 1949-1994)』. 중국사회과학출판사. pp.2481. 에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함.

1982년 9월에 김일성이 7년만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양 측 영도자는 북·중 간의 역사, 양국 인민간의 우정을 되돌아보며 북·중관계의 적극 추진을 언급하였다[37]. 그 후에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북·중 간의 방문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냉전기

[37] 人民日報. 1982. 「外電評述金日成主席訪華」. 『人民日報』. 1982.9.17.

말기 양극체제의 완화와 외교 고립 상태에 벗어나려는 공통점에 기초한 북한과 중국은 빈번한 방문 행사를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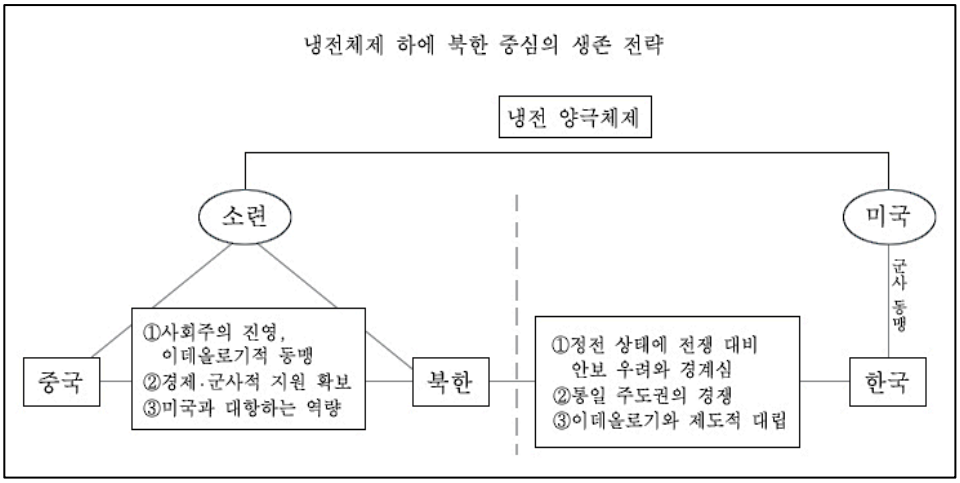
4. 냉전 체제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상호적 변화

여기까지 1950 년 한국전쟁부터 1990 년초 탈냉전기전까지 냉전 체제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각각 어떤 단계를 겪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두 관계의 전개과정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발견이 있다. 바로 북·중관계가 좋았을 때는 남북관계가 늘 긴장된 상태가 나타나고 남북관계가 완화된 시기에는 북·중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 현상이다.

냉전체제 남북과 북·중관계의 변화 추이를 다시 요약하면 50 년대 전시에 공동 작전했던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이고 북한과 한국은 물론 적대 관계였다. 60 년대 중소분쟁과 남북이 서로에 대해 강경정책을 지속한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한 반면 한국과 적대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0 년대에 들어 두 관계가 반전이 되어 미중관계의 개선과 서로 다른 사회주의 발전 노선의 선택 등 원인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점차 악화된 한편 남북 간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50 년대(냉전 체제 형성)부터 90 년대 초기 (냉전 체제 완화)까지 두 관계가 왜 이러한 '반비례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를 대답하려면 '남한-북한'과 '북한-중국' 두 관계의 공통적인 주체인 북한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냉전 체제에 한반도 지역에 있어 북한이 당면한 정치 환경과 이에 따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생존 전략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하고 제시된다.

<표 3> 냉전체제 하에 북한 중심의 생존 전략



자세히 설명하면 미국과 소련 두 슈퍼파워(superpower)에 의해 형성된 냉전 양극체제 하에 한반도 지역에 있어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지점이다. 1953 년 10 월 1 일 전시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둔, 미국의 대한 원조와 투자 등을 둘러싼 한미 동맹 관계 강화에 대해 북한은 강렬한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내우외환에 시달린 북한이 한·미·중·소을 둘러싸 택한 생존 전략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지지와 합법성을 확보한 위에 소련과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물자 지원과 기술 제공을 통해 자신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소련의 전략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양 진영을 견제함으로써 안보 위기를 완화시켜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과 주선하면서 자신의 '주체'와 지위를 세운 것이다[38].

[38] 김학준. 1984. 「중소분쟁 속의 북한외교」. 아세아연구 통권 71 호. p.65.

이 전략을 통해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회득’에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전쟁 주도권(우선권)’, ‘통일문제의 주도권’과 ‘이념적 주도권(제도의 우월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전쟁 주도권 (우선권):

우선 남북 간 종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쟁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 북한은 늘 안보 우려에 위기감을 느끼고 전쟁 대비에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적대 상태는 물론하고 한국과 대화를 적극 추진한 시기에도 북한은 한국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②통일문제의 주도권:

두 번째로 남북 통일문제 논쟁에 있어 북한은 이 전략을 통해 통일의 주도권 경쟁에 이기려는 것이다. 남북 역대 정부의 통일안을 되돌아보면 남한 측은 ‘북진통일론’, ‘유엔 감시 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 통일 총선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등 안을 제기한 한편 북한 측은 ‘남조선혁명론’, ‘고려연방제’를 제의하였다. 북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기조를 둔 남한의 통일 사상과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조선민족의 뜻으로 스스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자주성’에 중심을 둔 북한의 통일 사상은 이념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에 맞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주도권을 얻기 위해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였다.

③이념적 주도권 (체제 우월성):

마지막은 한국과의 체제경쟁, 즉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이어진 상황에 북한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북한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확립하였다[39]. 주체사상의 이념지도 하의

[39]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00.

북한은 자신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전쟁의 위기 의식과 경계 심리, 통일 사상과 체제의 근원적인 갈등으로 인해 냉전 체제 하의 한국과 북한은 남북 대화를 누누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남북 간 근원적으로 서로에 대한 강한 불안감과 불신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냉전 체제 하의 남북관계는 발전과 정체, 개선과 악화가 반복된 불안정한 상태 속에 적대성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서 자연스럽게도 소련과 중국에 편향한다는 대외 전략을 수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중의 공통 변수인 북한의 심리와 전략을 분석함을 통해 우리는 냉전기의 이 두 관계의 상호 변화에 왜 '반비례한' 현상이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III. 1992-2016 년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20 세기 90 년대에 들어 미소 관계 회복,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따라 1945 년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40 여년 동안 유지해 온 냉전체제가 완화되어 세계 정세가 양극에서 다극화로 새로 구성된 가운데 한반도 지역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1988 년 2 월 25 일 한국 민주 선거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통령을 취임하여 북방정책을 제기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냉전체제에 미국·일본과의 의존 관계를 일정 탈피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완화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에 목표를 둔다[40]. 1990 년 9 월 30 일의 한소 수교와 1992 년 8 월 24 일의 한중 수교가 대표적인 성과다. 또한 1991 년 9 월 17 일 한국과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1992 년 남북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표는 남북관계에 있어 적대 상태에서 평화적·제도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이루는 관계 정상화로 된다는 것에 진보적인 의미를 둔다[41]. 한편, 90 년대 초기의 북한은 외부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내부적인 경제 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직면하였다. 특히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에 대해 불만으로 인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미국,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하였다[42].

다음으로 1992 년 한중 수교 사건을 비롯한 냉전 체제의 붕괴부터 북한의 1 차 핵위기를 거친 '고난의 행군' 시기까지, 1998-2007 년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2000 년 남북 6·15 선언을 대표적으로 한 '협력과 대화'의 시기부터 연평해전과 북한 송금 특검 사건을

---

[40] 서병철. 1993. 「한국 외교정책의 요체 : 북방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1993-12-30, Vol.3, p.19-20.
[41] 張慧智. 2003. 『大國關係中的朝鮮半島』. 吉林大学出版社. p.431.
[42] 李敦球. 2007. 『戰後朝韓關係與東北亞格局』. 新華出版社. p.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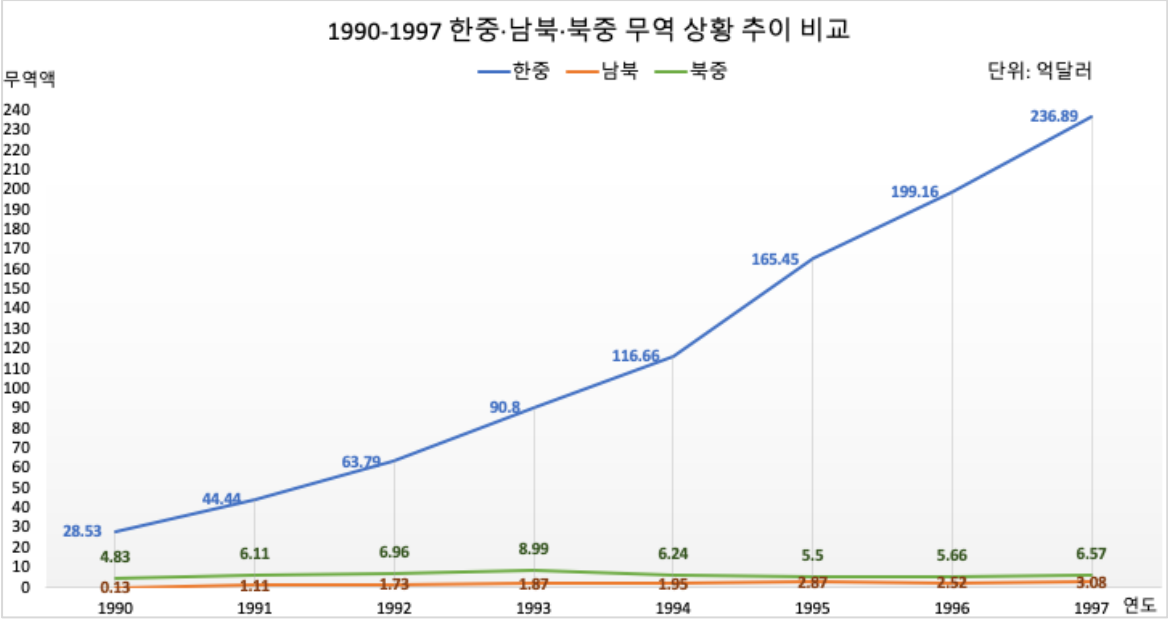
거쳐서 2007 년 10·4 남북공동선언까지, 그리고 2008 년 이명박 정부와 2013 년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권 시기와 같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남북, 북·중 과 한중 삼자 간의 연동적인 관계 변화를 경제적 또한 정치적 증거와 데이터를 통해 비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1992-1997

탈냉전기에 들어 1992 년부터 1997 년까지 이 시기에 한국, 중국과 북한은 각각 소련 해체, 동유럽공산주의권 몰락과 이에 따른 냉전체제의 붕괴 등 외부적인 국제 환경의 변화를 순응하면서 내부적인 사회, 경제 혹은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간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각각 경제적과 정치적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였다.

먼저 경제 측면에서 1990 년대부터 1997 년에 한국-중국, 한국-북한 그리고 북한-중국 세 나라 간의 무역 상황 추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990-1997 한중·남북·북중 무역 상황 추이 비교



자료 출처: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 China; 한국무역협회(KITA: https://stat.kita.net/); 통일연구원 (19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pp.97.

<표 4>를 보면 냉전 체제의 종결과 함께 90 년대 초기에 한중, 남북과 북·중 무역액이 모두 상승한 추세가 보였다. 한중 무역은 1990 년의 28.43 억 달러에서 1992 년의 63.79 억 달러로 상승하다가 1993 년에 90.8 억 달러에 급등하였다. 1993 년부터 한중 무역액은 계속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고 1997 년에 약 240 억 달러의 기록을 찍었다. 한편, 남북 무역의 추이는 1990 년의 0.13 억 달러에서 1997 년의 3.08 억 달러로 낮은 정도로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북·중 무역은 1990 년의 4.83 억 달러에서 1993 년의 8.99 억 달러로 상승하였다가 1994 년의 6.24 억 달러로 처음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고 그후에 1996 년까지 무역액이 계속 감소된 추세였다.

위 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짚어낼 수 있다. 첫째, 한중 무역은 전체적으로 급상승세가 보이고 특히 1993 년부터 42%의 성장률에 달하였다. 둘째, 북·중

무역은 전체적으로 낮은 정도로 부동하였으나 1993-1994 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셋째, 남북 무역은 전체적으로 상승한 추세였으나 한중과 북·중의 무역 상황에 비해 활성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점은 90 년대 말기부터 1997 년까지 이 세 나라를 둘러싼 대표적인 사건, 즉, 1992 년의 한중 수교, 1980 년대말기부터 부상하여 1994 년에 발발한 1 차 북핵 위기 그리고 1994 년 김일성 사망에 잇따른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대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세 나라 간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잘 반영하였다.

위 <표 4>에서 1993 년에 한중 무역의 급상승과 북·중 무역의 급하락이 나타난 원인은 1992 년의 한중 수교다. 한국전쟁 이래 지속해 온 40 여년 간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킨 한중 수교의 성사는 외부적으로 국제 환경의 급변과 내부적으로 당시 중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 보면 국제 환경의 급변, 즉 20 세기 89 년대 말기부터 냉전 체제의 붕괴, 중소 대립 완화와 이에 따른 중국, 소련, 북한 삼국 간의 전략적 관계의 완화가 한국과 중국이 더이상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적대성을 사수하지 않고 더 편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43]. 특히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공한 30 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거절하지 못한 소련 정부가 1990 년에 한국의 유엔 가입을 찬성한 것과 동년 9 월에 한소의 수교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와 별개로 한국과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44].

내부적으로 보면 한중 수교의 성사는 탈냉전 시대에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의 정책 전환에 순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차지하고

---

[43] Kim, Samuel S.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1. P.375; Hong Liu.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 Triangular Explan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pp.1084-1085.

[44] 何嘉有, 신상진. 2016. 『從相互隔絕到戰略合作:建交後中韓政治經濟關係的演化』. 復旦大學出版社. pp.25.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덩샤오핑은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제일의로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45]. 따라서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써 중국과 인접한 경제 신흥국, 한국과 관계 정상화시키고 경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일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정치 차원에서 당시 인권문제로 중국에게 압력을 넣은 미국과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대국화 전략을 계획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다[46]. 같은 시기에 한국 노태우 정부는 '소련, 중국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북방정책을 실시하였다[47]. 이처럼 한중의 수교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의 공동 목표로 되었다. 이 시기에 수교를 마련하기 위해 한중 양국 고위급 각료의 방문과 접촉이 매우 빈번하였다. 특히 1991 년 11 월 12 일 제 3 차 한중 APEC 부장급 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치앤치천(錢其琛) 외장의 면담과 1992 년 4 월 13 일 중국 국무원 총리 리펑(李鵬)과 한국 외장 이상옥 간의 면담은 동년 8 월 24 일 한중 수교의 성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48].

한편, 한중 수교는 20 세기 90 년대 중반 북·중관계의 정체와 저조를 불러올렸다. 1988 년 북한 김영남 외장과 1989 년 김일성 주석이 중국 방문을 했을 때 중국 지앙쩌민 주석과 치앤치천(錢其琛) 외장이 한중 민간무역사무소 설립과 한중 무역 확대 등 의제로 북한 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였고 1991 년 5 월 중국 총리 리펑(李鵬)이 방북 때 한국과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해 북한 측을 설득하는 등[49] 한중 수교에 있어 북한 측의 이해를 구하였으나

---

[45] 덩샤오핑(鄧小平). 1995. 『(덩샤오핑문선)鄧小平文選』. 제 3 권.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pp.370-383.

[46] Sutter, Robert G. 1996. "Korea: Improve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 Motives and Implications". 「연합통신」. 1996.3.2, pp.12-15.

[47] Seoul:Rese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8. 「Korea and World Affairs」. 제 6 권 제 4 기. pp.706-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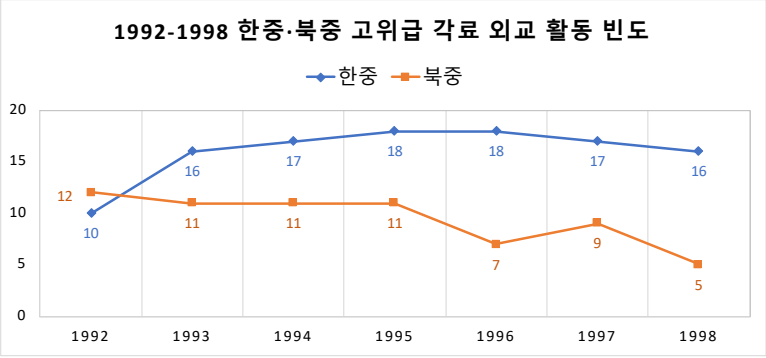
[48] 劉金質, 潘京初(2006).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彙編 1991-2006 (중국여조선반도국가관계문건자료휘편 1991-2006) 』. 世界知識出版社(세계지식출판사). p.18.

[49] 錢其琛(2003). 『外交十記』. 世界知識出版社. p.152-153.

1980 년대에 빈번히 이루어진 북·중 간의 방문과 외교 활동에 비해 1992 년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간의 외교 활동이 현저히 저조하였다.

다음 <표 5>와 같이 그 전까지 북·중보다 빈도가 적은 한중의 외교 활동이 수교 후부터 해마다 빈번해진 반면에 북·중 간은 매년 11 건의 빈도에 유지하였다가 1998 년에 오로지 5 건만 있었다. 또한 1992 년 북·중 외교 활동 11 건 중의 9 건은 8 월 24 일 한중 수교 전에 진행한 활동이었다. 그 후에 북·중 간의 외교 활동은 주로 경제와 식량 지원, 기념일 축하 전보와 예술 공연, 문화 대표단 방문 등 내용에만 그치고 정치적인 의미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북·중 무역의 마이너스 증장과 정치적으로 북·중 외교 활동의 저조가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의 정체를 잘 반영하였다.

<표 5> 1992-1998 한중·북·중 고위급 각료 외교 활동 빈도



자료 출처: 劉金質, 潘京初(2006).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彙編 1991-2006 (중국여조선반도국가관계문건자료휘편 1991-2006)』.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지지을 잃고 한중 수교에 따라 중국과의 동맹관계도 약화된 북한은 와부 국제 환경의 격동과 내부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면서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생존과 발전 노선을 모색하였다.

우선 북한이 당면하는 내부적인 혼란은 정치적으로 1994 년 김일성 주석 사망의 돌발 사건과 경제·사회적으로 1995 년부터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큰 홍수, 가뭄 재앙과 이에 잇따른 극심한 식량난과 대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었다. 2009 년 유엔과 북한 중앙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고난의 행군' 당시에 북한 당국이 발표했던 30 만명의 사망 인원수에 비해 실제 1990 년대 만으로도 24 만 명에서 42 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50]. 이러한 공전의 대재난으로 북한은 식량 부족, 농경지 유실과 무역 적자를 비롯한 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규모 탈북 등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이 닥쳐와 실질적으로 무정부상태에 빠져들었다. 다음 <표 6>의 통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당시 북한의 경제가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다. 더불어 정치 영역에서도 북한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1994 년 7 월 최고지도자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이에 따른 북한의 체제 위기다.

<표 6> 1993-1997 북한과 세계 주요 국가의 GDP

Data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1993-1997)					
					Unit: 100,000,000 US Dollars (at 1900's prices)
Country/Area	**Year**				
	1993	1994	1995	1996	1997
United States	60974	63451	65061	67498	70568
Russian Federation	4224	3688	3537	3409	3456
Japan	31799	32148	32773	33921	34521
People's Republic of China	5493	6197	6850	7506	8170
Republic of Korea	3242	3519	3841	4110	4302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42	139	133	128	120

자료 출처: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s://unstats.un.org/unsd/snaama/Index)

[50]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38.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북한이 당면하는 외부적인 위기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NPT 탈퇴, IAEA 탈퇴 등 일련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고조된 1 차 핵위기와 북미 간의 전쟁 위기였다[51].

이처럼 내우외환에 시달린 북한의 대책으로는 첫째, 경제 영역에서 대외경제정책을 수정하여 자급자족한 폐쇄적인 경제 체제에서 세계시장에 첨가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개방형 경제'를 추진하였고 1992 년부터 외자 흡수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등 법률의 제정, '자유경제무역특구'의 설치와 대외무역체제의 개편을 비롯한 '경제 개방화'의 정책전환을 통해 국내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52].

둘째, 정치 영역에서 북한은 김일성 사망과 대재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체제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이 군대에 의존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선군정치 사상의 확립은 우선 김일성의 능력을 상대하지 못한 상태에 권력승계를 한 김정일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장군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먼저 군권을 장악한다는 전략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는 90 년대 중반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체제 위기를 맞아 군대에 의존하는 정치를 폈다는 전략이다[53].

셋째, 외교 차원에서 북한이 탈냉전시대에 들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과의 교섭과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소련 고르바초프 정부의 신사고 외교에 따른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수교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과의 외교 의존 관계를 낮추고 국제 사회에 참여하여 한국, 일본 등 국가와의 관계 회복에 좋은 환경과 조건을 창출하였다[54].

---

[51]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339.

[52] 李敦球. 2007. 『戰後朝韓關係與東北亞格局』. 新華出版社. pp.148.

[53]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335.

[54] 何嘉有, 신상진. 2016. 『從相互隔絕到戰略合作:建交後中韓政治經濟關係的演化』. 復旦大學出版社. pp.31.

1991 년에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남북기본협의서'의 체결, 1992 년 5 월에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립, 1991 년부터 국교 정상화를 위한 북일 간의 교섭 그리고 1992 년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의 개최 등은 북한의 대외 전략의 전환을 잘 드러냈다. 특히 '남북기본협의서'의 체결에 있어서 1988 년에 남북고위급회담 제 1 차 예비회담 개시 이래 남북은 핵사찰, 이산가족, 적십자, 체육 등 여러 영역에서 빈번히 고위급회담을 통해 접촉하였다. 다음 <표 7>은 1988 년부터 1992 년까지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 상황이다.

<표 7> 1988-1992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상황

	남북고위급회담					국회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계
	예비회담	본회담	대표접촉	분과위	핵통제위				
준비단계 (1988.8-1990.9)	10	-	-	-	-	11	8	15	44
제3단계(1990.9-1991.10)	-	3		-	-	-	2	8	22
제2단계 (1991.10-1992.2)	-	3	9	-	-	-	-	-	29
제3단계 (1992.3-1993.1)	-	2	26	47	22	-	8	-	88
계	10	8	44	47	22	11	18	23	183

자료 출처: 임동원. 1997.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p75.

<표 7>에서 제시된 듯이 1988-1992 년 해마다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 빈도와 회의 내용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4 년 간에 실시된 각종의 남북대화가 총 183 회에 이르고 그 중 본회담은 협쳐 총 8 회가 있었다[55]. 같은 시기(1992-1993)에 북·중 대화와 외교 활동의 건수와 비교하면 (<표 5> 참조) 탈냉전시대에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 국면에 처하는 북한이

[55] 임동원. 1997.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p75.

중국과 소련과의 연맹 사수보다 한국과 대화 증진, 일본, 미국과 접촉 시도 등 새로운 외교전략을 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출발로 회복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90 년대 중반에 들어 김영삼 정부의 요동친 대북정책과 남북 간 격화된 무장 충돌 사건 등 갈등이 있었다. 우선 남북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 심리가 이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남한은 북한체제가 자멸하고 말겠다는 인식을 갖은 한편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북한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위기의식, 이른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이 심화되게 된다[56]. 이처럼 인식의 대립 하에 90 년대 중반부터 남북 간의 충돌이 빈발하였다. 1996 년에 판문점을 둘러싸 북한은 "남측이 북한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않겠다고 선언한 사태를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형편에서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위한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그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57]"고 강조하여 11 월 20 일에 판문점의 연락사무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였다. 더불어 북한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호전적 발언을 하고 있으나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 스스로가 파멸하는 길이 될 것[58]'이라고 비난하며 한일·한미 군사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남북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강렬한 비난과 불만을 서로 분사한 가운데 남북 간의 충돌 태세가 한층 악화되었다. 그 외에 1995 년 남북 쌀 지원 협상 결렬, 1996 년 북한 잠수함 '무장간첩' 강릉 상륙 사건과 이에

---

[56] 윤철기, 구갑우. 2013. 「남북한 대화에서 남북한의 상호인식 변화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2013-08-31, Vol.9 (1), p.5, pp.23.

[57] 안희창. 1996. 「북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오늘부터 잠정적」. 『중앙일보』, 11 월 20 일.

[58] 중앙일보. 1996. 「"북한도발자행땐 파멸" 김영삼대통령 전방시찰」. 『중앙일보』, 4 월 5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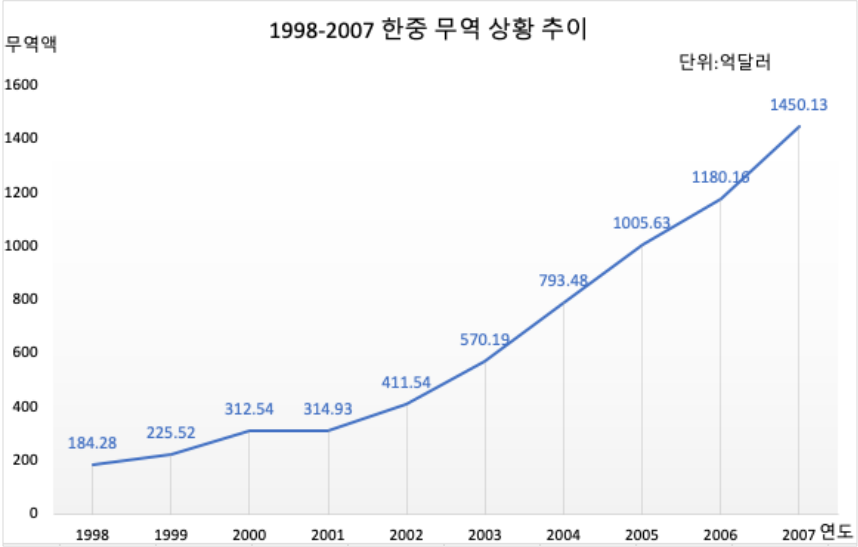
따른 김영삼 정부의 북한 방문 금지, 적십자 지원 중단 등 정책의 실시와 함께 남북 대화가 갈등과 불신의 분위기 속에 단절되었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탈냉전 시대에 들어 사회주의 진영의 퇴조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게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된 한편 소련 해체, 한중 수교와 '고난의 행군' 등 내우외환의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중국과의 연맹 사수에서 한국, 일본, 미국과 대화 증진을 시도하게 되었다. 한중 수교 이래 1992-1998 년에 경제적 무역 활동과 정치적 외교 활동의 왕래가 모두 줄어들고 소원해진 북·중관계에 비해 남북대화는 북방정책의 연속으로 화해와 협력의 기조에서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90 년대 중반에 들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북한 사회에 닥쳐올 내외적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정부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빈발은 90 년대 초기 남북대화의 열렬한 분위기를 연속하지 못한 채 90 년대 중반 이후 남북관계가 일정 퇴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2. 1998-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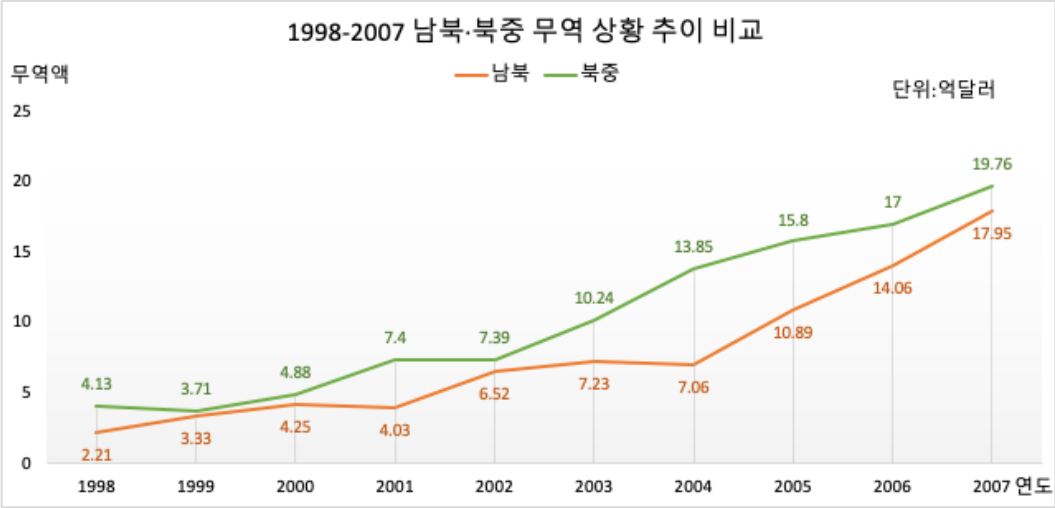
탈냉전시대에 순응하여 자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과 관계 구축을 모색한 한국, 북한과 중국은 21 세기에 접어들어 1998 년에서 2007 년까지의 시기에 새로운 관계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으로 이 시기에 세 나라 간의 무역 상황 추이를 비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1998-2007 한중 무역 상황 추이



자료 출처: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 China; 한국무역협회(KITA: https://stat.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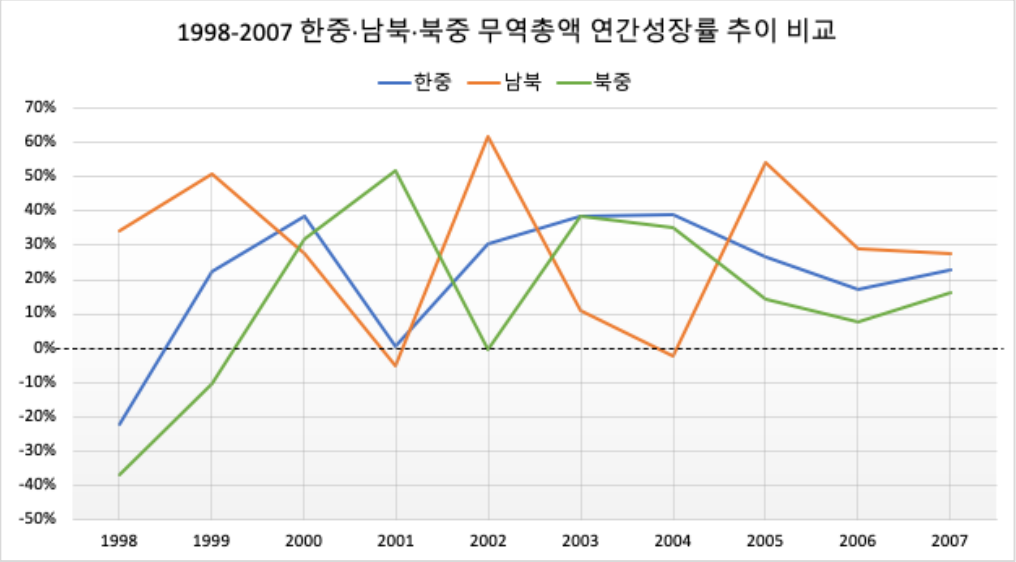
<표 9> 1998-2007 남북·북중 무역 상황 추이 비교



자료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 China; 한국무역협회(KITA: https://stat.kita.net/)

<표 8>와 <표 9>는 1998-2007 년 한국-중국, 남북한과 북한-중국 간의 총무역액과 추이 상황을 제시한다. 남북과 북·중에 비해 한중 간의 무역액이 차원이 다른 정도로 해마다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1 년부터 폭발적으로 급등하여 2005 년에 처음으로 1000 억 달러의 무역액에 이르렀다. 한편, 이 시기에 남북과 북·중 간의 무역 상황은 특정 시기에 오르내리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상승한 추세가 보였다. 특히 북·중은 2002 년, 남북은 2004 년부터 연간 무역액의 증가 태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2-1997 년에 1.91 억 달러의 남북과 북·중의 평균연간무역액이 각각 1.91 억 달러와 6.36 억 달러로 되어 3 배나 차이났으나 (<표 9>참조) 1998-2007 년에 남북 무역은 북·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급속히 늘어난 것도 이 시기에 남북 간의 경협 확대를 잘 반영하였다.

<표 10> 1998-2007 한중·남북·북중 무역총액 연간성장률 추이 비교



자료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 China; 한국무역협회(KITA: https://stat.kita.net/)

위 <표 10>는 <표 8·9>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한중, 남북과 북·중 무역의 연간성장률 추이를 비교한다. 한중 무역은 21.49%의 평균연간성장률로 전체적으로 상승한 태세가 보이고 2004 년에는 39.16%의 최고 성장률에 달하였다. 2000-2001 년 간의 성장률은 38.59%에서 0.76%로 떨어졌으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남북과 북·중 무역 성장률의 경우는 기복(起伏)이 매우 심하고 불안정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남북 무역 성장률은 2001-2002 년에 -5.18%에서 61.79%로, 2004-2005 년에 -2.35%에서 54.25%로 급등한 반면, 1999-2001 년과 2002-2004 년에는 50.68%에서 -5.18%, 61.79%에서 -2.35%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락하였다. 북·중 무역 성장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1998-2001 년과 2002-2003 년에는 각각 -37.1%에서 51.6%, -0.2%에서 38.7%로 급등한 한편 2001-2002 년에 51.6%에서 -0.2% 그리고 2004-2005 년에 35.4%에서 14.1%로 급락세를 보였다.

남북과 북·중 무역 성장률 추이를 비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특정 시기에 남북과 북·중 무역 성장률의 추세가 늘 정반대로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9-2001 년 남북 무역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때 북·중 무역 성장률이 급등하였고 2001-2002 년에 남북은 급등, 북·중은 급락 태세였다. 또한 2002-2003 년에 반등한 북·중 무역 성장률과 반대로 같은 시기에 남북 무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2004-2005 년 간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남북 무역 성장률이 다시 급등한 반면 북·중의 성장률은 21.3% 대폭 떨어졌다. 즉, 1999-2001 년, 2001-2002 년, 2002-2003 년과 2004-2005 년이라는 특정 기간에는 남북 무역 성장이 늘어나면 북·중 무역 성장이 경색되고 반대로 남북이 경색되면 북·중이 급등했다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정 시점을 가지고 이 시기에 남북과 북·중 무역 간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과 터닝 포인트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북한의 밴드왜건(bandwagon)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1998 년 2 월 25 일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여 '햇볕정책'을 비롯한 대북포용정책을 제기하였다. 90 년대부터 쏟아 나온 '북한붕괴론'이라는 국제사회의 논조에 대해 북한 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흡수통일'의 기대가 더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59]'는 입장을 밝혔다. 즉, 햇볕정책은 남북이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비정치 영역의 '협력' 확대를 통해 정치적인 갈등을 '화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목표를 둔 것이다[60].

햇볕정책 실시부터의 1 년 간 1998-1999 년에 남북 간 경제 영역의 무역 활동이 보다 확대되었으나 정전협정 이래 문제로 되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규정을 둘러싼 남북 간의 분쟁이 지속되어 1999 년 6 월 9 일 북한 함정의 NLL 침범 사건 발생에 의해 6 월 15 일에 남북 해군 교전이 일어나 제 1 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61].

제 1 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후 햇볕정책 실시에 따라 회복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다시 좌절 당하고 1999-2001 년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무역의 축소(<표 10>참조)와 정치적으로 남북 대화 빈도의 감소가 남북관계의 경색을 잘 반영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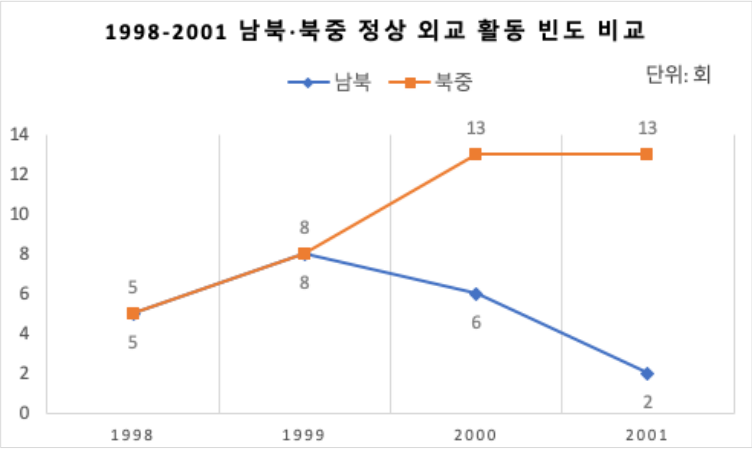
[59] 중앙일보. 1998. 「[김대중 15 대 대통령 취임사 전문](2)」. 『중앙일보』, 2 월 26 일.

[60] 김근식. 200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한국과국제정치(KWP) 』, 2002-06-30, Vol.18 (2), pp.99.

[61] 「제 1 연평해전」. 대한민국해군 사이트. https://www.navy.mil.kr/mbshome/mbs/navy/subview.do?id=navy_060406010000

한편, 90 년대 중반부터 정체된 북·중관계는 1998 년 김정일체제의 공식 등장과 함께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북·중관계의 복원 요인은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탈냉전 시대에 순응한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에서 남북한 두개의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중 경쟁에 있어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는 노력을 해왔다. 한편 급속히 발전된 한중관계에 대한 경계와 대미관계 개선과정에 유리한 협상 지위 확보[62] 등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회복이 매우 절실한 것이다. 이 시기의 북·중관계는 전쟁 경험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전통적인 혈맹 관계로부터 실리주의에서 자국의 경제·정치·안보적 이익 추구와 지위 확보를 위한 '친선협력'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변모하였다[63].

<표 11> 1998-2001 남북·북·중 정상 외교 활동 빈도 비교



자료 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劉金質, 潘京初(2006).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彙編 1991-2006 (중국여조선반도국가관계문건자료휘편 1991-2006)』.

[62] 김경호. 2001. 「탈냉전기에 있어서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지역연구』, 2001-12-27, Vol.4, p.45.

[63] 李南周. 2005.「朝鮮的變化與中朝關係——從"傳統友好合作關係"到"實利關係"」. 『現代中國關係』2005 年第 9 期, p.55.

<표 11>은 이 시기에 남북과 북·중 고위급 각료의 외교 활동 상황을 제시한다. 1998 년과 1999 년에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남북과 북·중 고위급 각료 외교 활동이 2000 년에 들어 정반대된 추세가 보였다. 그 중에 특히 1999 년 6 월 3 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단장으로 하는 공식 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지난 1991 년 김일성 방중 이후 8 년 만에 처음의 북한 방문으로서 그동안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었다[64]. 2000-2001 년에 북·중 간의 정상 외교가 13 회로 빈번하진 반면 남북 간의 정상 대화는 2001 년에 단지 2 회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표 10>와 같이 이 시기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이 대외 정책의 중심을 북·중관계 복원(북·중 경협 확대와 북·중 대화 증진)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북관계의 회복은 2000 년 6 월 15 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이에 따른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불린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55 년동안 분단의 역사를 딛고 남북 최고지도자가 직접 면회함으로써 남북의 관계 정상화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문제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해결', '남북이 제기한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기초한 통일 지향', '이산가족과 친척 방문단 교환 촉진', '경협을 통해 다분야에서의 협력·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남북 당국의 대화 개최'[65] 다섯 조의 내용을 다루었다.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 대화의 가장 뚜렷한 증진은 북핵 문제, 이산가족 상봉, 교환방문, 개성공단과 금강상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 프로젝트,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의제를 둘러싸 2000 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이다.

---

[64] 김경호. 2001. 「탈냉전기에 있어서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지역연구』, 2001-12-27, Vol.4, p.43.

[65] 김대중, 김정일. 2000. 「[묻어버린 그 전쟁] 6·15 남북 공동선언」. 태학사. 본질과 현상, 2019-06-01, Vol.56 (1), p.65-66.

다음 <표 12>는 2000 년 제 1 차부터 2007 년 마지막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 상황과 각 차례 회담에서 다룬 의제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표 12> 2000-2007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상황

2000-2007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상황										
				관광사업		경협 사업				북핵문제 해결
연도	차례	이산가족	군사회의	금강산관광	다른관광사업	철도항구 등	개성공단	경협회의	문화사업	
2000	1					○				
	2	○	○		○	○		○		
	3	○						○	○	
	4	○			○			○	○	
계		3	1	-	2	2	-	3	2	-
2001	5			○		○	○			
	6									
계		-	-	1	-	1	1	-	-	-
2002	7	○	○			○			○	
	8									○
계		1	1	-	-	1	-	-	1	1
2003	9									○
	10									○
	11								○	
	12									
계		-	-	-	-	-	-	-	1	2
2004	13		○				○			○
	14									
계		-	1	-	-	-	1	-	-	1
2005	15		○	○		○				
	16								○	
	17						○		○	
계		-	1	1	-	1	1	-	2	-
2006	18									
	19									
계		-	-	-	-	-	-	-	-	-
2007	20	○								
	21									
계		1	-	-	-	-	-	-	-	-
합 계				2	2	5	3	3		
		5	4	4		11			6	4

자료 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표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0 년에 개최된 제 1 차-제 4 차 정상회담과 이듬해 개최된 제 5, 6 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군사회의, 관광·경협·문화 사업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고 특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설치를 비롯한 남북 경협 프로젝트가 이 시기에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또한 <표 10> 2001-2002 년 남북 무역 성장률이 -5.18%에서 61.79%로 반등한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2 년에 들어 남북과 북·중 무역 성장률 추세가 다시 반전된 원인은 2002 년 6 월 29 일에 남북 간에 벌어진 제 2 차 연평해전과 동년 10 월에 북미 대립의 격화와 이에 따른 제 2 차 북핵 위기의 발발이다. 해결되지 못한 채 현안이 된 남북 갈등 중 하나의 큰 이슈인 NLL 문제로 인해 일어난 2 차 연병해전의 교전 결과로 북측 전사상자 30 여명, 남측 전사 6 명, 부상 19 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관계 과정에 있는 남북관계를 손상하였다[66]. 더불어 2002 년 10 월부터 '고농축우라늄 개발 시인' 을 둘러싸 미국과 북한 간의 분쟁이 다시 불거지게 되면서 미국 국무 장관 켈리가 방북 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했음으로써 북핵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67].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함에 따라 북핵 위기가 새로 터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북·미관계가 백열화 상태로 되었다. 협의되지 못한 북·미 간의 핵 논란이 점차 군사적인 긴장과 대치 상태로 확대되어 2 차 핵위기 촉발로 인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형세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개최된 제 8 차(2002.10), 제 9 차(2003.1)와 제 10 차 남북정상회담(2003.4)에서는 주로 2 차 북핵 위기의 발생과 문제 해결을 중심 의제로 다루었다(<표 12>참조). 2002 년 4 월에 임동원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남북관계를 복원한다는 합의를 했으나, 두 달 후에 일어난 2 차 연평해전과

---

[66] 「제 2 연평해전」. 대한민국해군 사이트. https://www.navy.mil.kr/mbshome/mbs/navy/subview.do?id=navy_060407010000

[67] 송은희. 2008. 「제 1·2 차 북핵 위기를 통해 본 미·북 갈등 구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2008.11, pp.158.

북핵문제의 발생은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68]. 따라서 2000-2002 년 다양한 합의를 이룬 지난 7 차례 회담에 비해 2002-2003 년의 남북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 상태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2003 년 초에 한국 정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 송금 논란이 일어났다. 2003 년 1 월 30 일에 감사원은 "현대상선이 남북회담 직전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4000 억 원 중 2 억 달러 상당을 대북 관련 사업자금으로 지급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 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69]"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었고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성과인 2000 년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면서 남북관계가 한층 저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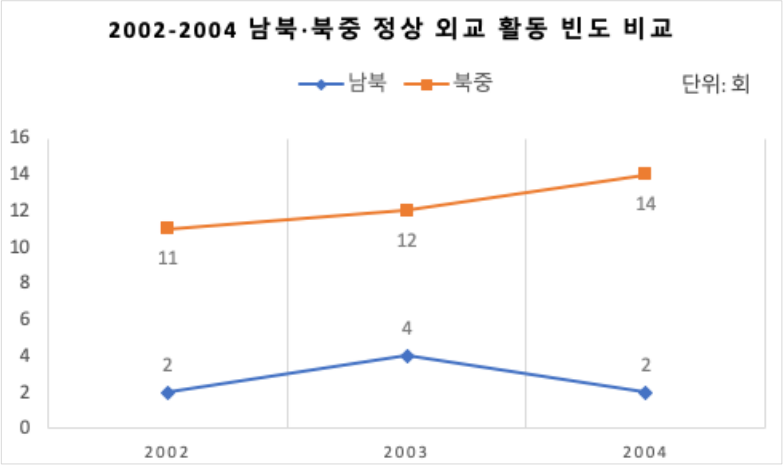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미 대립의 백열화 속에 북한은 경협 증대와 대화 증진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에 편향된 밴드왜건(bandwagon)을 보여주었다. 경제 영역에서 북·중 무역액의 급등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이 시기에 양국 정상 외교 활동의 빈도를 통해서도 잘 반영된다. 다음 <표 13>와 같이 제시된다.

<표 13> 2002-2004 남북·북중 정상 외교 활동 빈도 비교

---

[68] 「남북정상회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241

[69] 이장희. 2003. 「[대북송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제언 - "대북 송금 논란, 정쟁 아닌 민족이익 차원에서 해소해야"」. 민족 21. pp.98-99.



자료 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劉金質, 潘京初(2006).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彙編 1991-2006 (중국여조선반도국가관계문건자료휘편 1991-2006)』.

2002 년 2 차 연평해전과 2 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2002 년에 남북 간에는 2 회의 정상 대화만 전개되고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2003 년에 4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 남북 대화의 저조와 달리 북·중 정상 외교 활동은 해마다 늘어나고 2004 년에는 14 회에 달하였다. 남북에 비해 급등한 북·중 무역 규모와 빈번해진 북·중 정상 외교 방문은 이 시기에 남북관계 복원보다 북·중관계 구축에 중심을 둔다는 북한의 밴드왜건을 잘 드러냈다.

대북 송금 논란과 '햇볕정책'의 제한성, 실천 수단의 현실적 효용성 처하 등 평가[70]로 비판을 받은 김대중 정부를 대신한 노무현 정부가 2003 년에 출범하여 '평화번영정책'을 제기하였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대화를 심화시키고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이념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70] 김토대. 1998. 「한국통일과 해외한인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응 ; 햇볕정책 합리성 평가 및 보완대책」.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98, Vol.1998 (1), p.22-23.

‘햇볕정책’의 정신을 승계한 위에 대북지원의 규모를 보다 증대하고 동북아 구도 속에 한국이 주변국가와의 관계구축을 보다 중요시하는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평화협력체’와 같은 체제 구상을 통해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협력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것으로 ‘햇볕정책’보다 더 큰 차원에서 정책목표를 두고 있었다[71].

이와 함께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완화시킨 또 하나의 계기는 같은 시기에 2 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 자회담의 개최와 이에 따른 북미 대립의 완화다. 북미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2003 년 3 월 20 일에 미국에 의해 발발한 이라크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자 대화’의 방식을 통해 핵 문제를 협상하기로 동의하였다. 2003 년 4 월에 열린 북·미·중 3 자회담에서 북·미가 다자 회담 참가국을 협상한 결과로 미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6 자회담을 개최하도록 결정을 내렸다[72].

2003 년 8 월부터 2005 년 9 월에 끝난 4 차례 6 자회담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 단계인 1 차(2003.8.27-29)와 2 차 6 자회담(2004.2.25-28)은 주로 핵위기에 대한 각국의 주장과 해결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고 이 단계에서 특히 대북지원과 핵 동결 선행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협상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둘째 단계는 2004 년 6 월 23 일-26 일에 열린 제 3 차 6 자회담이다. 의견교환을 토대로 이번 회담에서 각국은 비핵화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제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비핵화에 타협하였으나 핵포기와 핵동결의 범위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북미의 의견 대립을 지속하였다[73]. 북·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원점으로 되돌리게 된 6 자회담을

---

[71] 김원동. 2003.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개요, 정책 및 과제」. Silloe yŏn'gu, 2003-12-26, Vol.13 (2), p.161.

[72] 韓獻棟. 2009. 『朝鮮半島的安全結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201.

[73] 韓獻棟. 2009. 『朝鮮半島的安全結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202-204.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음으로 정체된 4 차 6 자회담은 2005 년 8 월 26 일에 1 년만에 다시 개최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이번 회담에서 각국이 비핵화 협상을 벌인 성과로 2005 년 9 월 19 일에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9·19 공동성명'의 골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파기하고 NPT 와 IAEA 에 복귀한다고 약속하고 대신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제공, 대북 경제 협력, 북미 신뢰구축 추진 등 내용을 약속한다는 것이다[74]. 6 자회담 개최 이래 2 년의 우여곡절에 거친 끝에 거듭된 협상을 통해 탄생된 9·19 공동성명은 비록 북핵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으나 기왕의 합의에 비해 비핵화에 대한 참가국 각자의 약속이 서면 형식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다 높은 구속력과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6 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되었다[75].

'햇볕정책'에 이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연속과 6 자회담 성사에 따른 북핵 위기와 북미 대립의 완화에 따라 2004 년부터 그동안 경색된 북미 대화가 회복된 기미가 보였다. 경제 영역에서 2004-2005 년에 남북 무역 성장률이 -2.35%에서 54.25%로 비약하고(<표 10>참조) '평화번영정책'의 실시 하에 각종의 남북 경협 프로젝트가 재개되었다. 정치 영역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정상회담은 이 시기에 다시 재개되어 특히 2005 년에 열린 3 번의 남북회담(제 15-17 차)에서 전에 비해 군사, 경협,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 것은 어느 정도 남북 대화의 회복을 보여주었다(<표 12 >참조).

한편 이 시기의 북·중 간의 친선협력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급등한 남북의 무역 성장률에 비해 북·중은 35.4%에서 14.1%로 떨어졌지만 플러스 성장이 유지되었고

---

[74] 王俊生. 2012. 『朝核問題與中國角色——多元背景下的共同管理』. 世界知識出版社. p.91-92.

[75] 時永明. 2005. 「朝核問題六方會談的顯示與未來」. 和平與發展季刊, 2005.4, pp.24.

정치 차원에서 2 년 간에 총 26 회의 고위급 각료 외교 방문 활동으로 북·중관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북미관계의 완화와 6 자회담의 개최는 안보 차원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경계하고 견제하려는 북한의 긴장감을 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타자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 것으로 고립 상태 탈출과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비판과 제재의 완화에 따라 북한에게 '유일한 동맹'이었던 중국과 묶어 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2005-2007 년 간에 미세한 변동만 보인 한중과 북·중 무역 성장률에 비해 남북의 경우는 54.25%에서 27.67%로 하락하였다(<표 10 >참조). 정치 영역에서 보면 20005 년에 3 번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각 분야의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06 년 18 차 회담부터 2007 년 마지막 21 차 회담까지는 거의 파행적 운영을 면치 못하였다[76](<표 12>참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남북 무역과 남북 대화가 다시 좌절당한 것은 2006 년에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파기한 북한 핵실험 강행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상하기 위해 개최된 제 5 차 6 자회담 1 단계회의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경수로 제공 선행 문제에 신뢰관계가 결여한 북미가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회의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되어 북미관계가 다시 긴장된 상황에 북한은 2006 년 7 월 4 일에 '대포동-2 호'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 월 3 일에 1 주일 내에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77]. 국제사회의 반대와 안보리의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10 월 9 일 오전 10 시에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지역에서 1 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78].

---

[76] 「남북정상회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241

[77] 王俊生. 2012. 『朝核問題與中國角色——多元背景下的共同管理』. 世界知識出版社. p.96-98.

[78] 채규철. 2006. 「특집: 북한 핵실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전망 -엉거주춤한 절충안은 사태해결에 도움 안된다」. 『통일한국』, 2006-11-01, Vol.275, p.13.

이에 대해 신속히 반응한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10 월 14 일에 표결로 1718 호 결의를 통과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안보리는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고 대북지원 금지를 비롯한 대북제재를 실시하였다[79].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북핵문제는 더이상 북·미 대립의 산물이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 중국은 전례 없이 공식 입장에서 찬성표를 던졌다[80].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북핵문제를 둘러싸서 여태까지의 모든 협의와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6 자회담을 비롯한 다자 대화의 기제 구축을 파괴하였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도 큰 도전에 부딪혔다.

북한 핵실험의 강행은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진보당과 보수당 간의 갈등을 격화시켰음으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참여정부의 국내 정치 지지도가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 열린 2007 년 제 2 차 남북정상회담은 외부적으로 한국을 통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 접근하는 북한의 '통남통미' 전략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내부적으로 높아지는 한국 차기 보수정권 탄생 출현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증진을 통한 정부 지지율 획득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81].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은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구축',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그리고 '남북 인도적 협력'과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82]. 제 2 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프로세스에서 간접적인 미북 정상 간 공감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나 북핵문제, NLL 문제를 비롯한 핵심

---

[79] 유엔(UN). www.un.org.

[80] BBC NEWS. 2006. China calls for calm over North Korea: https://www.bbc.co.uk/news/1/hi/world/asia-pacific/5403572.stm

[81] 고양석. 2013. 「7·4 남북공동성명에서 10·4 선언채택까지 남북대화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p,110.

[82] 전동진. 2007. 「제 2 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통일전략, 2007-12, Vol.7 (3), p.106-107.

문제에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0.4 남북정상선언의 효과가 매우 한계적이라고 평가된다[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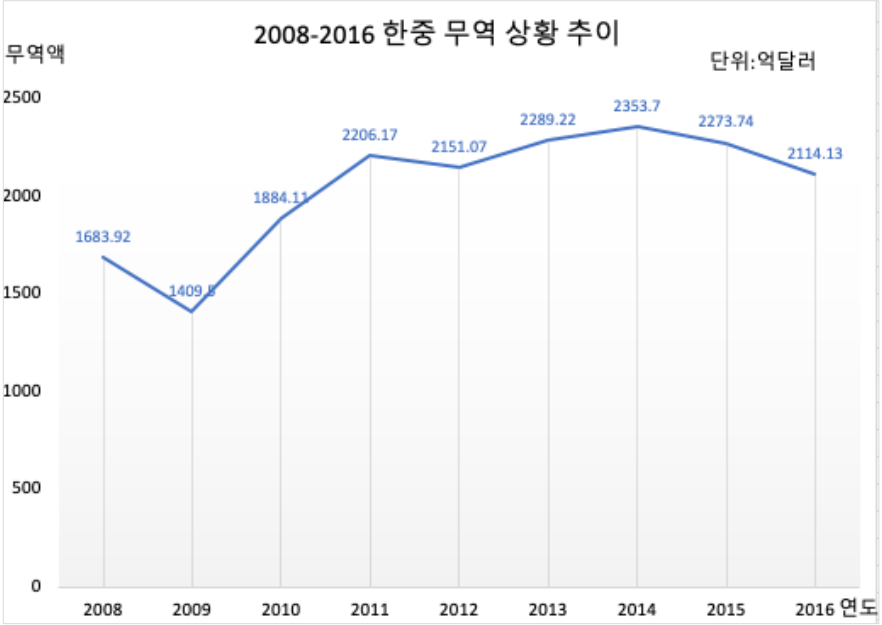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1998-2007 년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는 특정 시기에 정반대 추세로 연동적으로 변화된 것은 경제적인 무역 성장률 추이와 정치적인 고위급 외교 활동 빈도의 비교를 통해서 관찰된다. 남북의 경협과 대화는 햇볕정책, 2000 년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번영정책의 실시에 따라 2001-2002 년과 2004-2005 년에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2 차례의 연평해전, 2 차 북핵위기, 대북 송금 특검과 2006 년 북한의 핵실험의 영향을 받아 1999-2001 년, 2002-2004 년 그리고 2006 년 후에 냉각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의 남북관계는 개선과 악화의 반복 속에 요동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원했던 북·중관계는 1998 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전통적인 혈맹 관계에서 친선협력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변모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6 년 북한 핵실험 강행에 대해 중국은 공식입장에서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찬성표를 던졌음으로 북핵 문제는 북·중관계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2008-2016

2008-2016 년에 남북과 북·중 무역 상황은 1998-2007 년에 비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이 세 나라 간의 무역총액과 무역 연간 성장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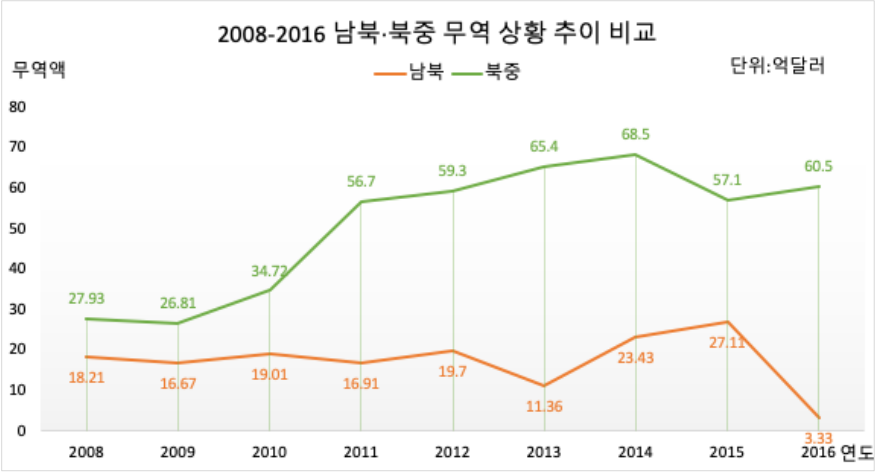
<표 14> 2008-2016 한중 무역 상황 추이

[83] 전동진. 2007. 「제 2 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통일전략, 2007-12, Vol.7 (3), p.121.



자료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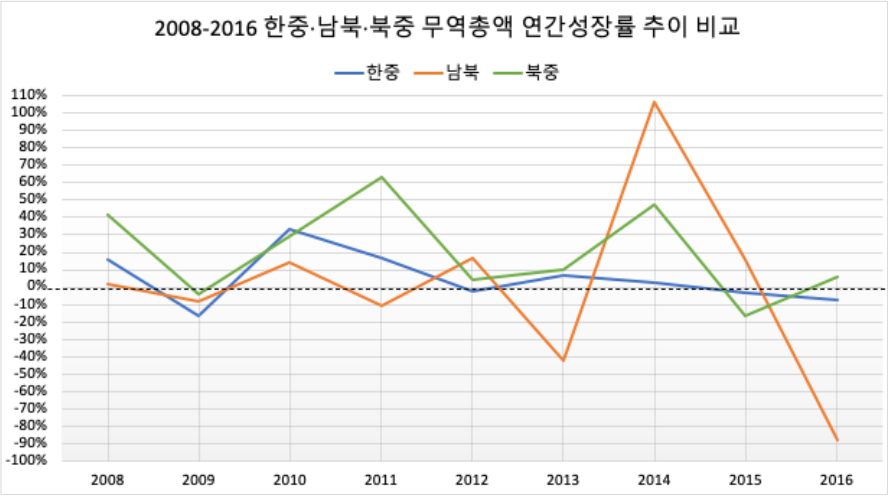
<표 15> 2008-2016 남북·북중 무역 상황 추이 비교



자료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한국무역협회(KITA: https://stat.kita.net/)

위 <표 14>와 <표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8-2016 년에 한중 무역은 1998-2007 의 상승세에 이어 전체적으로 상승한 추세였다. 2009 년의 무역액이 일시 떨어졌지만 2010 년에 다시 반등하여 2014 년에 2354.7 억 달러의 신기록에 달하였다. 한편, 1998-2006 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남북과 북·중의 무역 규모가 2008 년에 들어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2011 년부터 북·중 무역은 남북보다 3 배 넘는 차이나 늘어났다. 추세를 보면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 북·중 무역에 비해 남북의 무역이 큰 발전이 없이 계속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5 년의 최고 기록은 27.11 억 달러만 이룬 반면 최저 기록은 2013 년 11.36 억 달러로 떨어진 것은 남북 무역의 저조를 잘 반영하였다.

<표 16> 2008-2016 한중·남북·북중 무역총액 연간성장률 추이 비교



자료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 China; 한국무역협회(KITA: https://stat.kita.net/)

위 <표 16> 세 나라의 무역 성장률 추이를 보면 변동이 있지만 평균 연간성장률 5.21%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플러스 상성을 이룬 한중에 비해 남북과 북·중의 경우는 1998-2007 년의 상황과 비슷하게 부침을 거듭한 추세가 보였으나 플러스 범위 내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한 북·중 무역 성장률과 다르게 남북의 경우는 2013 년과 2016 년에 각각 16.5%에서 -42.3%, 15.71%에서 -87.72%로 급락한 것으로 매우 불안정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1998-2007 년에 28.86%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2008-2016 년의 남북 무역 평균성장률은 2.49%에만 그친 것은 이 시기 남북 무역 활성의 악화를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2008-2016 년에 전과 다른 남북 무역의 저조와 2013 년과 2016 년 무역 성장의 급락은 이 시기 남북관계의 변화를 드러낸 중요한 경제적 근거다.

우선 2008-2016 년에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적인 가장 큰 변화는 한국 진보-보수 정권의 교체, 즉 김대중·노무현 진보 정부의 퇴장과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의 출범이다. 2008 년 2 월 25 일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김대중 정부부터 10 년 간에 집권한 진보 정권을 교체하고 진보 정권 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는 10 년 만에 진보와 보수 정권의 여야 교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비핵·개방·3000 구상',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10 년 내에 북한주민의 소득이 1 인당 3000 달러 경제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고[84]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구상은 더 온건한 표현인 '상생과 공영'으로 전환되었다[85].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접근 방식은 경제적 개입, 특히 경제제재의 수단 적용과 한미동맹의 강화다[86]. 그는 전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비판하고 대북

[84] 이창헌. 2013.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정치정보연구, 16(2). p.232.
[85] 안홍욱. 2008. 「대통령 비핵・개방' 한계 인정…'상생・공영' 으로 수정」. 『경향신문』. 7 월 11 일.
[86] 이창헌. 2013.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정치정보연구, 16(2). p.235.

압박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87]”라고 남북관계에 있어 한미동맹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제 개입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 북한은 정부 기관지인 로동신문에서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은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이명박의 집권으로 하여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88]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는 2008 년 5 월 이명박 대통령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표현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89].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냉각은 2008 년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에 따른 금강산 관광과 개선 관광의 전면적 중단으로 더욱 악화된 가운데 동년 12 월 1 일 북한 군부의 ‘12.1 조치’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90]. 경협 사업의 중단은 점차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2009 년 북한 2 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한국 정부 ‘참으로 실망스럽다’와 중국 정부 ‘핵실험 실시 견결히 반대한다’라는 표현[91]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대를 받으면서 남북과 북·중관계에 타격을 준 것은 2009 년 남북과 북·중 무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 것에 통해

---

[87] 남제현. 2008.「李당선인 신년회견 일문일답」. 『세계일보』. 1 월 15 일.

[88] 김상협, 신보영. 2008. 「北 ‘비핵·개방·3000’ 전면거부 – 노동신문 논평, 李대통령 실명 첫 거론 맹비난」. 『문화일보』. 4 월 1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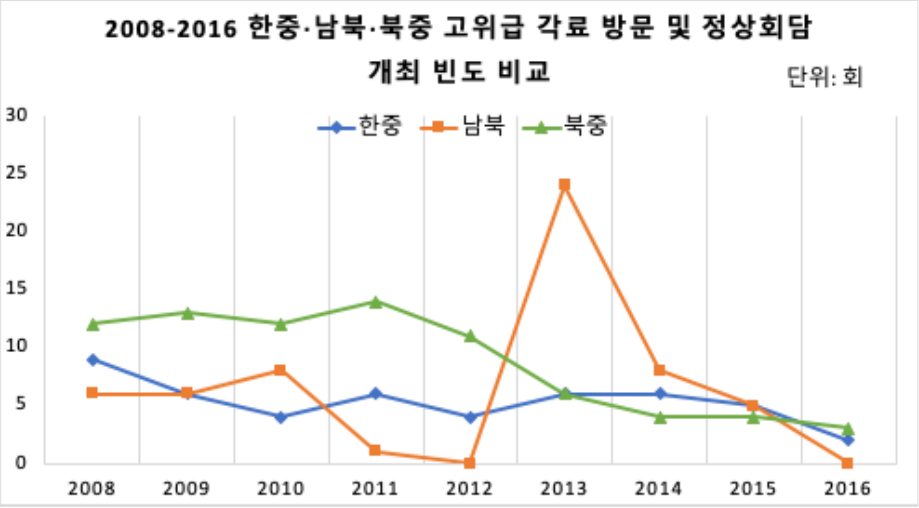
[89] 張世政. 2008. 「中外交部發言人: “韓美同盟”發言並無毁韓之意」. 『中央日報』. 6 월 11 일.

[90] 하영애, 윤황. 2011.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를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3, p.29.

[91]이제훈 황준범. 2009. 「북, 2 차 핵실험 강행」. 『한겨레신문』. 5 월 25 일.

확인할 수 있다(<표 16>참조). 이어 2010 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부 5.24 조치 실시에 따라 남북 간의 대화·접촉과 교류·협력이 모두 중단되고 남북 갈등이 더욱 가중되었다[92]. 2011 년 -11.05%로 떨어진 남북 무역 성장률과 선명히 대비된 북·중 무역은 63.30%의 성장률로 비약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된 이 시기에 농업, 수산업, 축산업과 방지업 등 분야에 북한의 주요 무역국은 중국으로 변화하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다[93].

<표 17> 2008-2016 한중·남북·북중 고위급 각료 방문 및 정상회담 개최 빈도 비교



자료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통계; 주중 한국 대사관(http://kr.chineseembassy.org/); 주중 조선 대사관 (http://kp.china-embassy.org/).

[92] 하영애, 윤황. 2011.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3, p.29.

[93] 環球時報. 2014. 「韩报告：2013 中朝貿易創新高 超對華貿易依賴大」. 『環球時報』. 2014.04.24.

<표 17>은 2008-2016 년 한중, 남북과 북·중 간 정치적 대화 빈도 추이다. 한중과 북·중과 달리 고위급 각료의 직접 방문 활동이 없는 남북의 경우는 남북 부장급 회담을 중심으로 통계한다. 2008-2012 년 이명박 정권 시기에 평균 1 년에 5.8 회의 빈도로 진행된 북·중 외교 방문에 비해 남북회담이 2007 년의 55 회에서 2008 년 6 번으로 대폭 축소되었다[94]. 2011 년 특히 2010 년 남북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이후 2011 년과 2012 년에 남북 대화가 거의 전면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남북관계의 긴장과 악화를 반영하였다.

<표 18> 2008-2012 남북회담 분야별 회담개최 횟수

2008-2012 남북회담 분야별 회담개최 횟수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총계
2008	0	2	3	0	1	6
2009	0	0	4	2	0	6
2010	0	1	3	4	0	8
2011	0	1	0	0	0	1
2012	-	-	-	-	-	-
총계	0	4	10	6	1	

자료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통계

개최 빈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각 연도 분야별 남북회담의 개최 횟수를 통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정책 실시 이래 남북대화가 단지 경제와 인도 영역에서 진행되고 정치 영역의 대화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남북 군사적 갈등 해결을 위해 개최된 4 차례의 군사회담에도 실질적인 합의가 없이 종결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남북의 대화와 접촉이 경협 분야 외에 거의 전면 단절되었다.

[94]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통계: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be/usrCmsStat/List.do?tab=1

<표 16·17> 남북과 북·중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북·중 무역의 비약과 남북 무역의 저조는 정치적으로 2011 년에 14 회나 진행된 북·중 간 고위급 각료 방문의 최고 기록과 함께 남북관계 냉각된 이명박 정부 시기에 북한의 밴드왜건은 남북관계에서 북·중관계 구축으로 변화되었다.

남북 간의 대결 국면이 심화된 국면에 2011 년 12 월 17 일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3 대 세습 체제가 출범하여 핵 보유를 중심으로 하는 선군정치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2012 년 2 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2013 년 2 월 12 일에 3 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더욱 강경하게 고조시키면서 빠르게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는 남북관계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하였다.[95]

한편, 남북관계를 주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노력한다는 정책 목표와 역행한 남북관계의 단절 국면이 엄중해진 상황 속에서 2013 년 2 월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여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비핵화 실현과 통일과정 구축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96].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 의지를 북한 측에 표명하면서 남북회담 재개, 남북 대화 채널 구축 등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 협의에 있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개성공단을 중단하여 남북 대화 채널을 폐쇄한 북한의 강경 태도에 대해

---

[95] 이창헌. 2013.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정치정보연구, 16(2). p.247.
[96] 통일부. 2015.『2014 년 통일백서』. 통일부. p,3.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를 계속 제의하면서 7 회에 걸친 장관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협의하고 개성공단 폐쇄 위기를 완화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97].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와 북한 측의 제의 수용에 따라 2012 년에 전면 단절된 남북회담이 재개되었고 2013 년 동안에 2008-2016 년 간에 가장 높은 횟수인 총 24 회로 개최되었다(<표 17> 참조). 이 시기부터 2016 년까지 분야별 남북회담 횟수는 다음 <표 18>와 같이 제시된다.

<표 18> 2013-2016 남북회담 분야별 회담개최 횟수

2013-2016 남북회담 분야별 회담개최 횟수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총계
2013	1	0	22	1	0	24
2014	2	1	3	1	1	8
2015	3	0	1	1	0	5
2016	-	-	-	-	-	-
총계	6	5	26	3	1	

자료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통계

2013 년 총 24 회의 남북회담 중에 정치 분야 1 회, 경제 분야 22 회와 인도 분야 1 회 열린 것으로 경제 협력 영역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이 일정 복원된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또한 <표 16>에서 2013-2014 년에 남북 무역 성장률이 단절 국면 때의 -42.30%에서 106.25%로 반등한 것을 통해 경제 영역 남북 대화와 협력의 복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와 접촉의 재개는 남북경협에만 그쳤고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어 온 북한 비핵화 해결, 남북 해상분계선 갈등, 통일 방식 등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

[97] 변창구. 2015. 「제 5 장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중간평가와 발전과제」. 통일전략 제 15 권 제 3 호. p.164.

속에서 북한은 2013 년 2 월 12 일에 3 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첫 핵실험인 3 차 핵실험 발생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가동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98].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 등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99]. 이에 따라 복원되기 시작한 남북대화도 다시 큰 충격을 받아 남북회담은 2013 년 24 회로부터 2014 년 단지 8 회로 축소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된 추세였다(<표 17>참조).

북·중관계도 북한 3 차 핵실험 단행으로 인해 매우 불편해졌다. 2012 년 11 월에 시진핑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3 개월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진핑 정부의 북·중관계 촉진에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다[100]. 3 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다' 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 '북한 비핵화 독촉' 등과 같은 표현으로 북한 핵실험 단행에 대해 불쾌한 태도를 표명하였다.[101] 3 차 핵실험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냉각은 2014 년부터 북·중 무역 성장률의 급락과 같은 시기에 북·중 고위급 각료 외교 방문 횟수가 이전 시기(2008-2012 년) 평균 12.4 회에서 6 회로 감소된 것을 통해 잘 보여주었다(<표 16·17>참조).

2014 년 이후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 회복 제의-북한 미사일·핵 도발-한미연합훈련 강화-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악순환 속에 부침을 거듭하였다. 김정은 정권 3 년동안 북한의 대남정책은 "연초에는 유화공세를 펴다가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강경모드로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킨다"는 특징을 보였고[102] 이수석(2015)에 의해

---

[98] 송원형. 2017. 「北, 2013 년 3 차 핵실험 후 '준전시작전계획' 만들어」. 『조선일보』. 12 월 30 일.

[99] 연합뉴스. 2013.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연합뉴스』. 3 월 8 일.

[100] Jenny Jun. 2013. 「"Dealing with a Sore Lip: Parsing China's 'Recalculation' of North Korea Policy.". 38 North. 2013.03.29.

[101]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外交部:中國政府堅決反對朝鮮第三次核試驗」. 2013.02.13. http://www.caea.gov.cn/n6758881/n6758890/c6789378/content.html

[102] 이수석. 2015. 「출구 없는 남북관계」. 『북한』, 2015-03-30, Vol.519, p.44.

이는 북한 내부의 대남정책 의견대립,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초조한 고립 상태와 김정은의 즉흥적인 대남정책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된다[103]. <표 18>을 보면 2014 년 남북 고위급 회담은 8 회 개최되었고 남북 고위급 접촉, 남북 군사적 갈등의 현안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내용[104]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남북회담 개최 기간에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도발 사건이 지속되어 있어 결국 남북회담이 실질적인 합의 없이 종료된 것으로 2015 년 5 회로 감소되었다. 한편, 2013 년부터 변화된 북·중관계의 저조는 이 시기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2014-2015 년 북·중 간의 고위급 각료 방문 활동은 1 년에 4 회의 빈도에 머물렀고 경제적으로도 양국 무역 성장률이 2004 년 35.4%에서 2005 년 14.1%로 하락한 것으로 빈발한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은 북·중관계 증진을 어렵게 하였다.

한반도 정세에 긴장과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2016 년 1 월 6 일 북한 4 차 핵실험 강행은 저조한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 한국 통일부는 2017 년 통일백서에서 2016 년을 '위기와 결단의 한 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촉구를 전재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도발로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2016 년 3 월 8 일에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105].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 실시에 따라 2016 년 정부 차원에서 남북회담이 전면 단절되어(<표 18>참조)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이하였다.

북·중관계도 2015 년 12 월 10 일 김정은 정부의 북한 수소 폭탄 보유라는 충격적인 발표에 이어서 2016 년 1 월 4 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악화되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한미일 연합훈련이 강화해진 가운데 김정은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 정세에 혼란과 불안을

---

[103] 이수석. 2015. 「출구 없는 남북관계」. 『북한』, 2015-03-30, Vol.519, p.47-48.
[104] 『2015 년 통일백서』. 2016. 통일부. p.136.
[105] 『2016 년 통일백서』. 2017. 통일부. p.53.

가중시킨 것으로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고화와 북·중 신뢰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된다[106]. 외교적으로 보면 2016 년 북·중 고위급 각료 방문 활동이 3 회만 이루어진 것으로 3 차 핵실험 이래 냉각된 북·중 대화는 4 차 핵실험으로 저조기에 접어들었다. 한편, 한중관계도 2016 년 9 월 30 일 한국 사드 배치 사건으로 인해 급악화되면서 2016 년 한중 무역과 한중 외교 방문이 대폭 감소되었다(<표 16·17>참조). 2016 년 한중·남북·북·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북한은 2013 년에 남북접촉 제의 수용, 개성공단 재개 등으로 남북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군사동맹 강화의 자극을 받은 북한은 3 차 핵실험 이래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핵 전략에 중심을 둔다는 전략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밴드왜건은 중국에 있으면서도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중관계가 냉각되어 북한이 점차 고립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2008-2016 년에 남북관계에 있어 남 측 보수당의 정권교체와 한국 대북정책의 전환과 북 측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으로 인해 남북 갈등이 격화되면서 남북 대화는 단절과 재개 속에 반복되는 불안정한 행태가 보였다. 2011 년 심각해진 남북 군사적 갈등과 2009 년 2 차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관계에 한반도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증진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3 차와 4 차 핵실험 단행이 계속됨에 따라 북핵문제에 중국의 불만이 쌓이면서 북·중 접촉 감소 등으로 북·중관계가 냉각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 보유 고수로 인해

[106] 坦克装甲车辆. 2016. 「中朝关系陷入低谷 朝鲜对华低头」. 《坦克装甲车辆·新军事》2016 年第 1 期. p.6.

점차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져들었고 북핵문제의 미해결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과 불안의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IV. 1993-2016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변화의 요인 분석과 양자 간의 상호적 변화

여기까지 탈냉전 시대에 들어 1993 년부터 2016 년까지 각 시기에 한국, 북한과 중국의 정치와 사회가 각각 어떠한 굴곡과 도전을 만났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추이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장은 탈냉전 시대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관계가 서로에 대해 어떠한 상호적인 영향이 작용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내부적 요인은 주요 행위자, 즉 당사자 간의 경제 실력, 정치 결책, 발전 전략과 리더십 등을 일으키고 외부적 요인은 당사자 이외의 다른 행위자의 영향 그리고 전략적 환경(strategic environment)을 의미한다. 예컨대 남북관계에 있어 내부적인 요인은 한국과 북한의 대북·대남 정책의 채택, 통일 사상의 상이, 경제발전의 욕구, 외교전략의 변화 등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 등 행위자가 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1993-2016 년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와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북관계의 변화요인

(1)내부적 요인

남북관계에 있어 남과 북 간의 활동과 교류에 직결되는 것은 바로 남북 정부 당국의 대북·대남정책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탈냉전기 후부터 남북 간의 갈등을 헤쳐나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역대 한국 정부에서 여러

대북정책과 통일안을 모색하고 펼쳤는데도 남북관계가 여전히 개선과 경색 속에 요동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한 점에 그 원인이 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결여한 것은 냉전 시기부터 존재하였으나 탈냉전기에 들어 이 특징이 보다 선명해졌다.

우선 특정 정부 임기 내의 정책을 보면 냉전 시기에 한국전쟁이 정전의 형태로 일시 끝났고 냉전 체제에 들은 한국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반공론'과 '남조선혁명론'을 비롯한 적대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그 중에 박정희 정부의 반공정책이 대표적이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자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겠다는 결심을 표하고 대북 강경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70 년대에 들어 경제 발전의 성취와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장통일'과 '반공'의 고수에서 '평화적 통일'과 '대화'의 구축으로 변모되었다[107].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60 년대까지 지속되어 온 대립관계에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한 정부의 임기 내에 대북정책이 전환된 것은 탈냉전기 시기에 김영삼 정부에도 잘 나타났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연합을 형상하고 통일국가를 세운다는 김영삼 정부 출범 시의 정책목표와 다르게 1 차 핵위기와 북한의 체제 위기가 일어난 후 북한의 경착륙을 통해 통일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어 그때그때의 상황과 현경에 따라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성격을 띈다[108]. 이에 따른 남북관계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일관성이 결여한 것은 특정 정부 내에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 전환에 이어 노태우 정부이 북방정책을 폈음으로 남북관계가 회복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후기의 정책 전환으로

---

[107] 변창구. 2011. 「제 1 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함의」. 통일전략.11(2), 2011.7, p.21.

[108] 이희선, 김기수. 1999.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 -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99-09-01, Vol.8 (2), p.34-36.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정체되었다. 이후 진보 정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비롯한 대북포용정책이 경색됐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시켰으나 북핵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하였다. 2007 년 이명박의 당선에 따라 보수파가 다시 집권하게 되어 전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대북압박정책을 새로 실시하였다[109].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정권 시대에 대북압박정책에 대해 북한은 군사적 도발,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부침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처럼 역대 정부가 서로 다른 성향을 띄는 대북정책을 폈음으로써 어느 정책도 그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지 못해 충분한 효과성이 발휘되지 못한 채 서둘러 다음 정부로 넘겨준 형태로 돼버렸다.

이 현상은 남북 간의 불신과 한국의 정치 환경에 연관된다. 우선 전쟁 때부터 여태까지 해온 한국과 북한은 여러 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였으나 근원적으로 서로의 체제 또한 안보에 대한 불신과 대치적 심리는 쉽게 해소하지 못하였다. 신뢰구축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써 남북이 상대방의 그때그때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70 년대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경제 발전과 정치적 영향력의 상승에 따라 남북 협상에 우세를 차지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은 보다 민감하고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이 강하다. 불리가 생기면 강경하게 움직이는 북한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도 역시 온건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과 회복의 악순환에 빠져드릴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정치 민주화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80 년대부터 정치 민주화가 점차 한국에 정착되었다. 권위

[109] 이창헌. 2013.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정치정보연구, 16(2). p.230.

정부와 달리 탈냉전기에 들은 한국정부는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적 정부로써 사회 또한 정당(政黨)의 여론과 평가에 감독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영삼 정부 후기의 정책전환은 당시 여전히 보수적인 색채가 짙었다는 국내의 여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그의 효과성에 대해 많은 비판과 의혹을 받아 결국 보수당의 강경정책이 등장한 것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된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사건과 상대방의 태도 또한 국내적 여론에 따라 변화한 한국과 북한 정부의 대북·대남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한 것이 남북관계를 직접적으로 영향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내부적인 요인은 전쟁의 정전 상태와 이에 따른 남북 간의 적대 심리이다. 2016 년까지 보면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62 년이나 되었는데 전쟁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는 채 지속해왔다. 이에 따른 군사분계선 주변에 남북 간의 충돌과 갈등이 빈발하였고 남북이 전쟁 대비에 늘 방심하지 못하였다. 물론 탈냉전기와 함께 회복기에 들은 한국과 북한이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쟁의 지속 상태와 체제 갈등에 따른 정치와 안보 영역에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과 적대 심리는 쉽게 해소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듯이 이러한 적대 심리의 근원은 남북관계에 있어 신뢰가 결여한 것이다. 즉, 냉전 체제만큼 상대방을 '적'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지만 탈냉전기에 들은 남과 북은 평화통일의 공동 목표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도 자신의 국가 이익, 특히 안보적 이익의 측면에서 상대방을 '위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협정에 도달되지 못한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구축에 기대를 갖는 '신뢰'와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불신' 속에 반복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불신'의 구체적인 반영은 바로 90 년대부터 현재까지 현안 문제로 대두되는 북한의 핵위기다. 1960 년대부터 주체사상을 내세운 김일성 정부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90 년대에 들어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립 상태, 잇따른 자연 재해로 인한 집단적 사망과 경제 후퇴, 김일성 사망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위기를 당면한 북한은 '선군정치'를 확립하여 핵 개발을 통해 자신의 안보체제를 보장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이 선택한 생존전략과 북미 대립의 산물이라고 평가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남북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관계 구축을 노력했는데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에 그 원인이 크다. 특히 1998 년부터 2007 년까지 9 년동안 실시해 온 대북포용정책이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격을 받은 것은 주로 '포용적 정책을 폈는데도 북한이 여전히 핵 개발을 고수하는 태도만 보인다'라는 점이다. 1990 년대의 1 차 핵위기부터 2002 년 2 차 핵위기와 2006-2016 년 4 차례 핵실험 단행까지의 경험을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불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함으로써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쌓여온 신뢰를 훼손한다. 둘째, 남북 간의 신뢰 결여에 따라 남북대화와 협력이 중단되고 온건에서 강경으로 전환된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된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국가의 안보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음으로써 한미동맹의 강화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또한 남북관계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한반도에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남북관계에 있어 진정한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외부적 요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 남북 간의 적대 심리, 종전협정의 미체결 그리고 북핵문제 등이 있으면 외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미국이라는 행위자다.

1953 년 10 월 1 일 한국과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한국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외관계, 내지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 체제 하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에서부터의 남침 위협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한편,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당시 미국에 비해 한국의 GDP, 경제 발전과 군사력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비대칭적'인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다[110]. 냉전 체제하에 북한에게 한미동맹은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이라고 간주한다. 전쟁의 적대 관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에도 철저히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 시기에 한미동맹과 북미 대립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남북관계의 회복은 매우 국한된 것이다.

탈냉전기에 들어 한미동맹과 북미 대립의 구도가 여전히 존재하나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맞이하였다. 우선 한미동맹에 있어 탈냉전기에 들어서 한미 간의 전략적 차이가 보다 선명히 나타났다. 한국은 사회와 경제 영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능력과 자신감이 갖추게 되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회복함에 따라 과거 양극체제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대립 관계가 점차 약화된다. 이에 따라 과거 냉전체제 하에 북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에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목적에 근거한 한미동맹이 그의 필수성과

[110] 황지환. 2018. 「1990 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12-31, Vol.34 (4), p.36.

정당성이 훼손된다[111]. 한국은 전시 한미동맹 강화와 안보 보장에서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으로 그의 국가 전략을 재조정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소련'의 문제라기 보다 '한국과 북한', 즉 당사자 자결에 의한 한반도 내부의 문제라는 성격을 띈다. 이는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상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이런 한미 간의 대북정책의 차이가 잘 반영된다. 다시 말해서 탈냉전기에 들은 한미동맹은 '비대칭적'인 보호 관계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의 긴밀한 '파트너 관계'로 전환되고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한편, 북미 대립에 있어 90 년대 체제 위기를 겪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두된 '북한붕괴론'을 타파하고 자신의 체제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핵 개발을 대력 추진하게 되었음으로 북미 대립의 핵심 논점은 냉전 체제 때의 한국 전쟁과 이데올로기에서 핵무기 개발에 중점을 둔다. 특히 핵 논란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의 대북 경제 제재와 김정일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해 북미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다. 앞에서 검토한 듯이 북핵문제는 내부적으로 남북관계의 신뢰구축과 평화 증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를 흔들게 하여 미국의 개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상태가 보다 심각해질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한국과 북한 스스로의 문제, 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 스스로의 문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핵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온건 정책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남북의 평화통일도 다른 관여 없이 한반도 내에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뜻을 표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있어 한미동맹과 북미 대립을 둘러싼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대북 정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111] 나승학. 2015.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 Stephen M.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20(3), 2015-09, p.171.

2. 북·중관계의 변화요인

(1)내부적 요인

북·중관계의 변화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전쟁 때부터 공동의 작전 경험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공유에 의해 결속해 온 긴밀한 '혈맹관계'가 탈냉전기에 들어 경색되고 새로운 파트너 관계로 변모된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냉전체제 때 전쟁 경험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북·중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고 불신이 생긴 것에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불신은 서로 다른 사회주의 발전 노선과 정책의 채택 차이와 북핵문제에 잘 반영된다.

전통적인 혈맹관계는 같은 공산주의 신념의 공유, 제 2 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공동 작전 그리고 지속적인 대규모의 식량, 물자와 군사적 대북원조에 의해 결성된 것이다. 북한에 있어 전쟁 대비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보충하고 체제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한 것이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본다. 한편 중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구축을 통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공산주의 진영의 생명력을 고양시키므로 양극 체제 속에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에 목표를 둔다. 더불어 감정적 차원에서 양국 군대가 공동작전을 통해 '동지'라는 혁명적 우정이 매우 짙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중 간의 동맹관계는 작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밀히 맺어진 것이다.

그러나 90 년대 동구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에 따른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은 북한과 중국의 체제 발전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사상 원칙을 응원한 위에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자주노선을 고수한 북한과 달리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 시장 원리를 도입함을 통해 폐쇄적인 경제를 개방하고 외교 영역에서는 미국, 한국과의 국교 회복을

통해 냉전 체제 때의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발전과 국제적 이미지의 상승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북한이 느끼기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배신한 정책이고 미·중 관계 정상화와 한중 수교는 또한 북·중 간의 동맹관계를 배신한 행동과 같이 보인다. 대립에서 협력으로 추이한 탈냉전화의 시대 흐름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서로 다른 발전 노선의 선택은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유발하였고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핵 개발을 비롯한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은 북·중관계의 악화를 가속하였다.

(2)외부적 요인

탈냉전기게 들어 북·중관계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지장은 바로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수용한 것은 미국, 내지는 한미동맹의 움직임과 직결된 것이다.

북한에게 중국은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국가이며 한미동맹과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는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맹국이다. 한편, 미중 경쟁의 구도 속에 있는 중국에게 한미와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이 중국의 안보체제를 해치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은 핵 폐기 주장을 견지하는 전제 하에 북·중 경협 증대, 대북원조 약속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비난 등 정책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는 2차 핵 위기 때 북미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중국이 협상 참가국 중간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북한이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느끼기에 한미와 북·중 간의 세력균형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북미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게 보일 때 북한이 핵

개발을 양보하고 협상을 참여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북·중 간의 관계 복원과 파트너십 구축도 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북미 협상의 결렬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등에 따라 안정된 세력균형이 깨진다고 느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인 북한은 양보를 통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협상 테이블에서 등을 돌리고 핵실험 강행과 같은 협상을 위반하는 행동을 택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가장 연관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이다. 즉,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북한은 중국이 주장하는 '타자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 더이상 능동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고 핵과 미사일 도발 등 강경 조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한미와 대항하는 전략적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거듭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6 자회담의 협의를 파기한 행동으로 중국의 불만과 불편감을 불러오게 되면서 북·중 간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112]. 한편, 중국의 태도에 대해 불만한 북한은 외세를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자강력 제일주의'[113]를 추진하므로 북핵문제 내지는 한반도 문제에 중국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 '북미 협상 – 협상 결렬 – 북미 갈등 격화 – 북한 핵·미사일 도발 –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 대북제재 중지와 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북미 협상 재개' 라는 무한 순환을 반복하는 양태로 보인 북미 갈등과 북핵문제에 따라 북·중관계는 북한이 핵 도발보다 협상을 선택할 때 개선되고 북한이 협상보다 핵 도발을 선택할 때 경색된다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보면 북·중관계의 변화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북미 간의 대립 관계이고 이는 북미 협상의 진행 상황,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변화 추이에 따라 움직인다.

---

[112] 신종호. 2013.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과 동북아」. 성균차이나브리프, 2013-04-01, Vol.1 (2), p.110.

[113] 김상욱. 2016. 「북한 4 차 핵실험 1 개월 '북한 자강력 제일주의' 고수」. 『뉴스타운』, 2 월 6 일.

3.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상호적 변화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1993 년에서 2016 년까지 남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내부적으로 남북 정부 대북·대남정책의 일관성 결여, 한국전쟁이 종전되지 않고 정전 상태에만 그친 것에 따른 남북 간의 안보적 긴장감과 적대 심리 그리고 북한의 핵 위기가 있으며 외부적으로 미국이라는 행위자, 즉 한미의 동맹관계와 북미의 대립관계로 뽑힐 수 있다. 한편, 북·중관계의 변화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냉전체제의 붕괴와 탈냉전화의 도전에 대해 서로 다른 체제 생존 전략과 발전 노선을 수용함에 따라 생긴 불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개방형 대외 정책과 북한의 폐쇄적 자력갱생 정책 간의 상충과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라는 요인과 북핵문제의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로서 탈냉전화의 시대 흐름과 미중·북미 관계, 즉 미중 경쟁과 북미 대립에 따른 중국과 북한의 정책 수용이 있다. 두 관계의 변화요인을 비교적으로 봤을 때 공통한 변수는 내부적인 북핵문제와 외부적인 미국이 있다. 즉, 탈냉전기에 들어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에 있어 공통적인 변수는 북한의 핵 개발 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다. 다음은 이 두 가지 공통 변수의 작용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간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관계가 어떻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20 세기 90 년대 냉전체제의 붕괴와 세계의 다극화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소련의 해체에 따라 유일한 슈퍼파워로 남아 있는 미국은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이익과 지위를 공고화하는 새로운 동북아 정책을 수립할 과제가 시급하였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동북아 질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실시'와 '한미, 미일 동맹 강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적용하였다.

탈냉전기에 들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강경 기조로 유지해왔다. 북미 대립의 논쟁 핵심은 냉전체제 시기의 한국 전쟁과 이데올로기에서 탈냉전기의 북핵문제로 전환되었으나 북미 간의 대립과 적대 관계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적대정책을 실시한 것은 북한의 안보적 위협을 강조함을 통해 탈냉전 시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존속에 새로운 동기와 정당성을 부여하므로 한미와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북미가 협상했을 때 북핵문제가 오로지 북한과 미국 당사자 간의 문제로 천명하고 핵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중지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한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신중한 태도가 보인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즉, 북한의 적성(敵性)과 북미 간의 대립 관계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존재하는 전제 조건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펼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가 훼손되고 이는 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는 미국이 더이상 남북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이익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적대정책의 견지와 한미동맹의 강화는 탈냉전 시대 미국이 동북아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구비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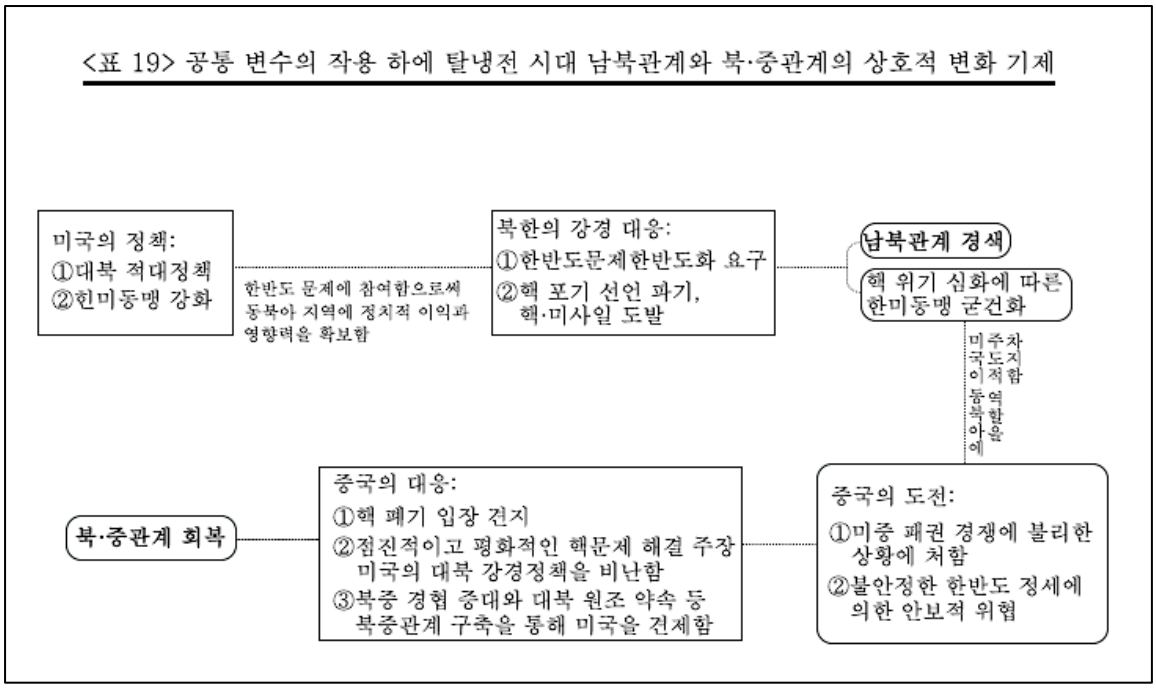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북한의 대응은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 내부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정치 영역에서 한국과의 대화·협력을 추진함을 통해 남북 평화통일에 있어 한미동맹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한 한편, 핵 무기 개발, 핵 실험 강행과 미사일 도발 등 조치를 단행하여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북한이 6 자회담의 핵 포기 선언을 파기하고 핵 실험 과 미시일 도발을 반복적으로

강행하는 행동으로 인해 경색될 수 밖에 없다. 한국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미 간의 대립에만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해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보 보장의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핵 문제의 심각화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정책은 미국의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체제 생존과 남북 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목적을 두지만 현안이 된 북핵문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남북관계의 경색과 한미동맹의 굳건화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치열해진 북핵문제와 북미 대립에 의해 미국은 대북제재와 한미 동맹을 강화함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발언권과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므로 미·중 패권 경쟁에 주도권을 잡게 된다. 중국에게 한미동맹의 강화는 동북아 지역에 중국의 정치적 이익과 지위가 미국에게 넘길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 대립과 북핵문제의 백열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가 중국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으로는 첫째, 비핵화의 입장을 천명한다. 즉,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중국의 안보 체제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은 무조건 핵 무기를 반대하고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둘째, 핵 폐기 목표의 전제 하에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의 실현은 평화 원칙에 의해 협상을 통해 점진적이고 포용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한다. 셋째,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대북원조를 약속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중관계의 증진을 통해 한미동맹을 견제하고 세력균형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는 또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미동맹 굳건화의 지속에 따라 탈냉전기의 북·중관계가 경색에서 개선으로 된 추이가 보인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이 제시된다.

<표 19> 공통 변수의 작용 하에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상호적 변화 기제



다시 말해서 탈냉전 시대에 북미관계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다.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일동맹과 미국의 동북아 동맹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정책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북미 양국 내부의 영향보다 한미동맹이 받을 영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미국은 대북 강경정책을 견지할 수 있게 되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을 비롯한 미국의 동북아 동맹 전략을 보다 공고화할 수 있고 미중 패권 전쟁에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 북핵문제의 현안과 한미동맹의 굳건화는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책은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핵 무기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다음은 이를 전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미국의 동북아 동맹 전략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가진 북·중 간의 관계가 경색에서 회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V. 결론

본 글은 탈냉전기에 들어 1993 년부터 2016 년까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연동적인 관계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비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에 있어 내부적인 연관성과 상호적 변화의 원리와 기제를 연구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연구의 답에 도달하기 위해 우선 탈냉전기 이전, 즉 한국 전쟁 때부터 형성된 냉전 체제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배경과 변화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 2 장에서 냉전기의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남북 간의 적대관계와 북·중 간의 공산주의 연맹 관계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냉전 체제 하의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는 반비례한 양태로 나타났다. 즉, 1950 년대 한국 전쟁 때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이고 한국과 북한은 적대관계였다가 60 년대 중·소분쟁의 격화와 박정희 반공정책의 전환에 따라 70 년대에 남북관계가 개선된 반면에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처럼 두 관계가 '반비례한' 추이가 나타난 것은 냉전 체제 하에 전쟁의 위기 의식과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남북 간 근원적으로 서로에 대한 강한 불안감과 불신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냉전 체제로 인한 안보적 또한 이념적 차원에 남북의 근원적인 적대성과 갈등으로 인해 북한이 체제 생존과 안보 보장을 위해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과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 정책을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냉전 체제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간의 '반비례한'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탈냉전기에 들어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양극 체제의 붕괴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제 3 장에서 탈냉전기에 들어 1993-2016 년 간에 두 관계의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는데 우선 탈냉전화가 시작하여 국제 환경이 격동한 시기인 1993-1997 년에는 1992 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에게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된 한편 북한이 중국과의 중국과의 연맹 사수에서 한국, 미국 등과 대화 증진을 시도하게 되어 이는 남북관계의 복원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이 시기 경제적 무역 활동과 정치적 외교 활동의 왕래가 모두 줄어들고 소원해진 북·중관계에 비해 남북 대화와 협력은 북방정책의 연속으로 화해와 협력의 기조에서 많이 늘어났으나 90 년대 중반에 들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북한 사회의 내외적 환경 변화와 남북 정부 간의 불신과 갈등의 빈발에 따라 초기 남북대화의 열렬한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한 채 90 년대 중반 이후 남북관계가 일정 퇴행한 추세가 보였다.

1998-2007 년에는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는 특정 시기에 정반대 추세로 연동적으로 변화된 것은 경제적인 무역 성장률 추이와 정치적인 고위급 외교 활동 빈도의 비교를 통해서 관찰된다. 개선과 악화의 반복 속에 요동친 남북관계는 2000 년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번영정책의 실시에 따라 2001-2002 년과 2004-2005 년에 대화·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2 차례의 연평해전, 2 차 북핵위기, 대북 송금 특검과 2006 년 북한의 핵실험의 영향을 받아 1999-2001 년, 2002-2004 년 그리고 2006 년 후에 냉각되었다. 한편 북·중관계는 1998 년 관계 복원 이래 전통적인 혈맹관계에서 실리주의에 근거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변모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8-2016 년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 정치와 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정치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으로 교체되며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에서 압박정책으로 전환된 한편 북한 권력이 3 세대인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강화되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 북한 핵실험 단행과 대북제재, 남북대화 단절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남북 군사적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남북관계도 전체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된 상황 속에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증진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계속 문제 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 강행은 북·중관계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는 핵실험 실시 때마다 북·중관계가 경제·정치 영역에서

냉각된 현상을 통해 관찰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 보유 고수로 인해 점차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져들었고 북핵문제의 미해결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과 불안의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제 4 장에서 탈냉전 시대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각각 이런 변화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뉘어 분석한 결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있어 내부적 요인은 남북 정부 대북·대남정책의 일관성 결여, 종전 협정의 미체결 상태와 이에 따른 남북 간의 안보적 경계심과 적대 심리 그리고 북핵위기의 심각화가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은 미국의 동북아 동맹 전략과 대북정책에 따른 한미동맹과 북미관계의 변화가 있다. 한편, 북·중관계의 변화 요인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이 각각 개방형 대외 정책과 북한의 폐쇄적 자력갱생 정책이라는 서로 다른 발전 노선의 선택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 그리고 북핵문제의 현안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탈냉전화라는 국제 환경의 흐름 속에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대립 관계의 변화가 있다. 두 관계의 변화요인을 비교하면 내부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정책과 외부적으로 미국이라는 행위자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두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준 공통한 변수이며 이 두 가지 공통 변수의 작용 하에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간의 상호적인 변화 기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통해 관찰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정치적 이익과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수용하였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 위기 현안에 근거하여 그의 정당성을 세운 것이며 탈냉전 시대 한미동맹의 존속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문제 한반도화'라는 주장을 천명하고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제재 중지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핵실험 강행과

핵·미사일 도발 등 조치를 단행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불안정화와 한미동맹의 굳건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동맹의 강화와 북핵문제의 심각화는 중국의 안보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 중국의 정치적 이익과 동북아 질서에 있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책으로는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다. 이를 전제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북한과의 협력 증대와 원조 약속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켰다.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한미동맹과 세력균형의 상태를 이룸으로써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견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가 회복된 양태로 보였다. 한마디로 탈냉전기에 북한의 핵 개발 정책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오고 이는 또한 북·중관계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론적 토대의 부족이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수없이 존재하나 양자 간의 상호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연구 주제를 다룬 방법에 있어서 이론적인 접근보다 경험적인 접근에 더 가까우니 이론적인 토대가 보다 부족한 것이 본 글의 하나의 한계점이다. 둘째는 다른 행위자보다 한국, 북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본 글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를 다룰 때 분석 대상을 북한, 중국과 미국으로 축소하고 이 네 가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두 관계의 변화에 있어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다른 행위자의 영향을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다른 행위자에 대한 검토의 부족은 본 글의 또 하나의 한계점이 된다.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추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속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VI. 참고문헌

1 차 자료:

- 저서

김일성. 1994. 『김일성. 1-2,5-7』.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大統領秘書室 1994-98. 『金泳三大統領 演說文集』. 서울 : 대통령비서실.

大統領秘書室 [편]. 1973-79.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1-16』. 서울 : 대통령비서실.

鄧小平. 2001. 『鄧小平文選』. 제 3 권. 人民出版社.

韓國軍事革命史 編纂委員會 [편]. 1963. 『韓國軍事革命史』. 서울 : 國家再建 最高會議.

韓國自由總聯盟 [編]. 1990. 『韓國의 中·蘇關係 變化와 北韓의 改革展望』. 서울 : 韓國自由總聯盟.

民族統一硏究院 [편]. 19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서울 : 民族統一硏究院.

劉金質, 楊淮生[편]. 1994.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1949-199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劉金質, 潘京初, 潘榮英, 李錫遇[편]. 1994.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1991-2006)』.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인터넷 자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대한민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n-zh/index.d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사이트. http://kp.chineseembassy.org/chn/.

- 통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e-나라지표. www.index.go.kr.

한국무역협회 (KITA). https://stat.kita.net/.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https://unstats.un.org/home/.

2 차 자료:

- 저서

박태균. 『이슈 한국사』. 파주: 창비, 2015.

백학순. 2014.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 성남 : 세종연구소.

이상우 [편]. 1987. 『統一韓國의 摸索 : 理念, 環境과 政策的 努力 = Search for one Korea』. 서울 : 博英社.

이영훈. 2004.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조갑제. 2009. 『朴正熙의 결정적 순간들 : 62 년 생애의 62 개 장면』. 서울 : 기파랑.

정일형. 1970. 『오직 한 길로』. 서울 : 新進文化社.

전쟁기념사업회. 1992. 『한국전쟁사』 제 1 권. 서울 : 행림출판.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2000.『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2000.

통일부 기획관리실 [편]. 1999. 『통일부 30 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 통일부 기획관리실.

통일부. 2015. 『2014 년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부. 2016. 『2015 년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부. 2017. 『2016 년 통일백서』. 통일부.

허문영. 1993.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關係』.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何嘉有, 신상진. 2016. 『從相互隔絕到戰略合作:建交後中韓政治經濟關係的演化』. 復旦大學出版社.

韓獻棟. 2009. 『朝鮮半島的安全結構』.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劉清才, 高科. 2007. 『東北亞地緣政治與中國地緣戰略』. 天津人民出版社.

錢其琛. 2003. 『外交十記』. 世界知識出版社.

沈定昌. 2008. 『韓國外交與美國』.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吳冷西. 1999. 『十年論戰:1956-1966 中蘇關係回憶錄』. 中央文獻出版社.

王俊生. 2012. 『朝核問題與中國角色——多元背景下的共同管理』. 世界知識出版社.

徐文吉. 2007. 『朝鮮半島時局與對策研究』. 山東大學出版社.

楊軍. 2006.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張慧智. 2003. 『大國關係中的朝鮮半島』. 吉林大学出版社.

平岩俊司 [저]; 이종국 [역]. 201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中華人民共和国：唇歯の関係 の構造と変容 (북한·중국관계 60 년：'순치관계' 의 구조와 변용)』. 서울：선인.

- 논문

김갑식. 2018.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8-12-14, Vol.2018, p.1631.

김근식. 200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회고와 전망」. 『한국과국제정치(KWP) 』, 2002-06-30, Vol.18 (2), p.95.

김기정, 나웅화. 2009. 「관망과 개입 1, 2 차 북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인 분석」. 『중소연구』, 2009-05-25, Vol.33 (1), p.13.

김경호. 2001. 「탈냉전기에 있어서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지역연구』, 2001-12-27, Vol.4, p.36-52.

김대중, 김정일. 2000. 「[묻어버린 그 전쟁] 6·15 남북 공동선언」. 태학사. 본질과 현상, 2019-06-01, Vol.56 (1),p.65-66.

김벽두. 1955. 「제네바회담의 의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4 권 8 호. p.24.

김원동. 2003.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개요, 정책 및 과제」. Silloe yŏn'gu, 2003-12-26, Vol.13 (2), p.161.

고양석. 2013. 「7·4 남북공동성명에서 10·4 선언채택까지 남북대화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재영. 2017.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 『통일법연구』, 3, 77-103.

김진호. 2018.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 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23(2), 2018.06, 93-114.

김천식. 2014.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통일과 평화』(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Vol.6 No.2, pp. 3-38

김토대. 1998. 「한국통일과 해외한인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응 ; 햇볕정책 합리성 평가 및 보완대책」.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98, Vol.1998 (1), p.5.

김형기. 2011.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 탈냉전기 한,미의 역대 행정부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2011-06-30, Vol.7 (1), p.127.

김학민. 2015. 「남북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 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8(1), 2015-03, p.35-64.

김학준. 1984. 「중소분쟁 속의 북한외교」. 아세아연구 통권 71 호. p.55-67.

남궁영, 김형기. 2009. 「탈냉전기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전략: 이벤트 데이터 기법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한국세계지역학회), 2009-04-30, Vol.27 (1), p.335.

나승학. 2015.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 Stephen M.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20(3), 2015-09, p.161-180.

런밍. 2011. 「2000 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 『동북아연구』, 2011-12-30, Vol.26 (2), p.149.

박종철. 2008. 「중소분쟁 초기 북한·중국의 연대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008-12, Vol.1 (21), p.39-66.

변창구. 2011. 「제 1 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함의」. 『통일전략』11(2), 2011.7, 9-38.

변창구. 2015. 「제 5 장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중간평가와 발전과제」. 통일전략 제 15 권 제 3 호. p.147-178.

서병철. 1993. 「한국 외교정책의 요체 : 북방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1993-12-30, Vol.3, p.19-20.

송은희. 2008. 「제 1·2 차 북핵 위기를 통해 본 미·북 갈등 구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2008.11, 158-169.

신종대. 2019. 「남북한 외교경쟁과 '6.23 선언' 」. 『현대북한연구』, 제 22 권 제 3 호, p. 200-231.

임동원. 1997.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1997-01-01, p.73.

윤대영. 2003. 「노무현 정부의 대북한 평화번영정책: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세계지역연구논총』 20 권 0 호. 한국세계지역학회. pp.209.

오병훈. 1992. 「북한(北韓) 대외경제정책(對外經濟政策) 변화(變化) 전망(展望)」. 『통일문제연구』, 1992-09-30, Vol.4 (3), p.99.

이수석. 2015. 「출구 없는 남북관계」. 『북한』, 2015-03-30, Vol.519, p.44-49.

안영민. 2003. 「평화번영정책 - 노무현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 남북 중심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 『민족 21』, 2003, p.104-107.

유연익. 2006.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이승만 국회의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38, p.166-196.

이장희. 2003. 「[대북송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제언 - “대북 송금 논란, 정쟁 아닌 민족이익 차원에서 해소해야”」. 민족 21. pp.98-99.

임재형. 2018.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관한 연구」. 『평화와 종교』, 2018-12-31, Vol.6, p.63-94.

윤태영. 2003. 「노무현 정부의 대북한 평화번영정책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세계지역연구논총』, 2003-06-30, Vol.20, p.207.

이희선, 김기수. 1999.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 -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99-09-01, Vol.8 (2), p.27.

조경근. 2012. 「제 5 장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 내용과 평가」. 『통일전략 』12(3), 2012.7, 151-188.

전동진. 2007. 「제 2 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통일전략, 2007-12, Vol.7 (3), p.97-132.

주성환. 2007. 「『평화번영정책』의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효과」. 『International area review』, 2007-03-30, Vol.11 (1), p.783.

조진구. 2003.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 2003, Vol.46 (4), p.227-256.

정지웅. 2017.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통일과 평화』, 2017-06-30, Vol.9 (1), p.162-194.

정태일. 2007.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간의 안보논쟁」. 『한국동북아논총』, (45), 2007.12, 145-166.

저현준. 1999.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1999 년 11 월호』(통권 제 335 호) (북한연구소), pp.82-91.

편집부. 1988.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력량의 편성」. 북한 1988 년 9 월호(통권 제 201 호). p.118-133.

하영애, 윤황. 2011.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를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3, p.27-54.

황지환. 2018. 「1990 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12-31, Vol.34 (4), p.33-58.

허태회, 윤영미, 윤황. 2009.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국제정치연구』, 12(2), 2009.12, 69-100.

呂明輝. 2013. 「朝鮮對我東北解放戰爭的支持」. 紅旗飄飄, 2013,(11).

盧寧. 2005. 「也談影響中國出兵朝鮮決策的因素」. 當代中國史研究. 2005,(5).

李南周. 2005.「朝鮮的變化與中朝關係——從“傳統友好合作關係”到“實利關係”」. 『現代中國關係』2005 年第 9 期.

李瑞琴. 2010. 「中朝關係的歷史演進及當代影響(1949-1961)」. 西南科技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姜龍範. 2002. 「中朝關係的歷史、現狀與發展——關於朝鮮半島問題上的中國戰略」. 『多元視野中的中外關係史研究——中國中外關係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大會論文集』.

龐彥. 2013. 「韓國歷屆政府對朝政策演變」. 『國際研究參考』, 2013, (11), 31-36.

沈志華. 2016. 「破鏡重圓:1965-1969 年的中朝關係」.華東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坦克裝甲車輛. 2016. 「中朝關系陷入低谷 朝鮮對華低頭」. 《坦克裝甲車輛·新軍事》 2016 年第 1 期. p.6.

Seoul:Rese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8. 「Korea and World Affairs」. 제 6 권제 4 기.

Sutter, Robert G. 1996. "Korea: Improve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 Motives and Implications". 「연합통신」. 1996.3.2.

- 특집

박순성. 2008. 「1·2 차 북핵위기와 한반도·동북아 질서 변화」.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8-01-01, Vol.13, p.101.

신종호. 2013.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과 동북아」. 성균차이나브리프, 2013-04-01, Vol.1 (2), p.110.

이동률. 2016. 「유엔제재 이후 북·중관계 전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6-04-26, Vol.58, p.15.

유호열. 2014. 「시론 : 일관성,지속성 유지해야 대북정책 효력 발휘」. 『통일한국』, 2014-11-30, Vol.371, p.8

정용석. 2010. 「우리의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지속 추진 필요」. 『북한』, 2010-04-30, Vol.460, p.20-27.

진희관. 1998. 「남북관계 : 심층기획 ; 가닥잡는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발언과 전망 :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분석 -통일과 경제, 함께 해결할 과제」. 『통일한국』, 1998-04-01, Vol.172, p.10

채규철. 2006. 「특집: 북한 핵실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전망 -엉거주춤한 절충안은 사태해결에 도움 안된다」. 『통일한국』, 2006-11-01, Vol.275, p.13.

- 기사

김상욱. 2016. 「북한 4 차 핵실험 1 개월 '북한 자강력 제일주의' 고수」. 『뉴스타운』, 2 월 6 일.

김상협,신보영. 2008. 「北 '비핵·개방·3000' 전면거부 - 노동신문 논평, 李대통령 실명 첫 거론 맹비난」. 『문화일보』. 4 월 1 일.

남제현. 2008.「李당선인 신년회견 일문일답」. 『세계일보』. 1 월 15 일.

『로동신문』. 1996. 8.12. 제 2 판.

송원형. 2017. 「北, 2013 년 3 차 핵실험 후 '준전시작전계획' 만들어」. 『조선일보』. 12 월 30 일.

이제훈 황준범. 2009. 「북, 2 차 핵실험 강행」. 『한겨레신문』. 5 월 25 일.

연합뉴스. 2005. 「<노대통령 '침략역사 정당화'불용 천명 의미>-2」.『연합뉴스』, 3 월 23 일.

연합뉴스. 2013.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연합뉴스』, 3 월 8 일.

안희창. 1996. 「북한,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오늘부터 잠정적」.『중앙일보』, 11 월 20 일.

중앙일보. 1973. 「통일에 장애 안되고 다수회원국 뜻이라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않는다」. 『중앙일보』, 6 월 23 일.

중앙일보. 1996.「"북한도발자행땐 파멸" 김영삼대통령 전방시찰」.『중앙일보』, 4 월 5 일.

중앙일보. 1998. 「[김대중 15 대 대통령 취임사 전문](2)」.『중앙일보』, 2 월 26 일.

중앙일보. 2003. 「[노무현 16 代 대통령 취임사] 요지」.『중앙일보』, 2 월 25 일.

環球時報. 2014. 「韩报告：2013 中朝貿易創新高 超對華貿易依賴大」. 『環球時報』. 2014.04.24.

人民日報. 1960. 「進一步鞏固發展中朝人民友誼 增強社會主義陣營偉大團結和力量 中朝兩國簽訂兩項經濟協定」. 『人民日報』. 1960.10.14.

人民日報. 1961. 「中國朝鮮友好合作互助條約」. 『人民日報』. 1961.7.11.

人民日報. 1982. 「外電評述金日成主席訪華」. 『人民日報』. 1982.9.17.

張世政. 2008. 「中外交部發言人: "韓美同盟"發言並無毀韓之意」. 『中央日報』. 6 월 11 일.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外交部:中國政府堅決反對朝鮮第三次核試驗」. 2013.02.13. (http://www.caea.gov.cn/n6758881/n6758890/c6789378/content.html)

BBC NEWS. 2006. China calls for calm over North Korea. (https://www.bbc.co.uk/news/1/hi/world/asia-pacific/5403572.stm)

VII. Abstract

A Comparison of Mutual Changes Betwee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from 1992 to 2016

Ding Tingting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from 1992 to 2016 and comparatively analyzes the major factors of these changes. Through analysis of the trends and factors,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nal relevance and mutual changes between these two relations, which aim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regionalism in the Northeast Asia.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After the post-cold war how did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relations change from

1993 to 2016 and why did the trends of these changes show a different pattern when comparing to the trends during the Cold War period? and (2)What causes the mutual changes between these two relations and how did they internally connect and influence each oth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in chapter 2 this paper firstly reviews the background and trend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under the bipolar system during the Cold It is concluded that the Cold War system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caused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1950s, during the Korean War, China and North Korea established a 'blood alliance' against the western capitalist group led by U.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me more hostile. Due to the Sino-Soviet split and the change of Park Chung-hee regime's anti-communist policy in the 1960s and after, the Inter-Korean relations started to revive as Sino-North Korean relations worsened. The reason why these two relations showed an inverse correlation trend is that due to the fundamental confrontation and distrust in ideology and secur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d to adopted such a foreign policy, which is, establishing alliance with the Communist camp led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order to ensure its regime survival and security guarantee.

Based on these reviews, in chapter 3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se two relations changed in the post-Cold War era from 1992 to 2016 and it separates the period into three parts: (1)In 1992-1997,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the world politics transitioned from unipolarity to multipolarity. The diplomatic opening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led to a serious deterioration in Sino-North Korean relations while the swing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Kim YoungSam Government aggravated the instabi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2)In 1998-2007,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showed an opposite trend in the field of economy and foreign affairs. With the implement of 'Sunshine Policy' and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the Inter-Korean relations were improved based on the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r-Korean talks in 2001-2002 and 2004-2005. Yet the two battles of Yeonpyeong, the second North nuclear crisis and the 2006 North Korean nuclear test has posed an increasingly dangerous and radical threat to the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after the Iraq War and the NATO Bombing of Chinese embassy in Belgrade happened, North Korea and China considered the U.S.

as a potential security threat and reached a consensus on promoting partner relationship in order to reduce the potential threats to security from the U.S. (3)In 2008-2016, new political and policy changes have taken place in North and South Korea. With the promotion of hard-line policy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strengthen nuclear strategy by the Kim Jong-un regime, economic cooperation and talks were cut off and the in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in a state of depression. Meanwhile, the partne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developed stably. However,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keep posing a serious challenge to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especially in 2013 and 2016.

In chapter 4, this paper discusses the factors of thes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By dividing the factors into internal and external par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ernal factors of Inter-Korean relations are a lack of consistency of South Korea's policy on North Korea, the increased security alertness due to the ceasefire agreement, the radical distrust which still exists and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while for Sino-North Korean relations, the internal factors are the ideological conflicts on different socialism model and foreign policy, and also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In term of external factors, the common factor of these two relations is the Northeast strategy of U.S.,

specifically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the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It show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has a mutual changes under the influences of their comm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hich are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the U.S.'s Northeast strategy. To strengthen its political gain and leading role in solving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the U.S. contributed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ROK-US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and adopted a strong policy against North-Korea based on its nuclear dispute, which led to a strong response from North Korea. Due to the increasing nuclear provocation by North Korea and the serious conflict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Inter-Korea relations were getting strained. On the other hand, to dominat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reduce its security threat, China protested U.S.'s strong policies and restraint against North Korea and suggested the adoption of engagement policies on sol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China's strategy developed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As maj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the trend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would greatly affect the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world politics. This paper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in form of comparison study on these two relations.

Keywords: 남북관계, 북·중관계, 탈냉전기, 변화추이, 변화요인, 상호적 변화.

Student Number: 2018-20199